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 정성철 · 백우열 · 이기태 · 우평균 · 현승수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 정성철 · 백우열 · 이기태 · 우평균 · 현승수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엔피(02-2277-4718)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02-517-5043)

ISBN 978-89-8479-825-0 93340

통일 외교 전략

349.11-KDC6 / 327.519-DDC23 CIP2016001239

가 격 9,0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요약 / ix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구성	4
II. 대(對)미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미국의 동맹·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대미국 통일외교 ...	7
1. 미국과 세계: 일극체제	9
2. 미국과 아시아: 동맹 딜레마	16
3. 미국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22
4.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중 (비밀) 협상	27
5. 한국의 대(對)미국 통일외교	29
III. 대(對)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33
1. 대중국 통일외교의 배경과 발전	36
2. 대중국 통일외교의 논리: 비용과 편익	41
3.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략	45
4.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망	60



IV. 대(對)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63
1. 연구 목표 및 구성	65
2. 대일본 통일외교의 목표 및 내용	66
3.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 인식	72
4.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77
5. 소결: 대일본 통일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94
V. 대(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97
1. 들어가며	99
2.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	101
3.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	118
4. 소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130
VI.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對)강대국 외교실패 사례 분석: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133
1. 들어가며	135
2. 탈소 신생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외교정향	136
3. 우크라이나의 사례	144
4. 조지아의 사례	155
5. 소결: 통일외교에 주는 함의	168

VII. 결론	173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75
2. 고려사항	179

참고문헌 / 1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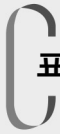


표 II-1 통일한국의 유형과 대중(對中) 정책	29
그림 II-1 미중 경제력: 1차 에너지 소비와 철강 생산량	12
그림 II-2 미중 군사력: 국방비와 군인수	13
그림 II-3 미국무역에서 양자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17
그림 II-4 미중 국방비, 1988~2014년	24
그림 II-5 미영·미소·미중 공동참여 국제기구	27
그림 V-1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의견 그룹의 구도	109
그림 V-2 러시아의 대륙횡단철도의 기본망 및 송전망 연결 사업계획 ...	120
그림 VI-1 탈소 국가들의 외교정향	139

미·일·중·러 4개국 및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정·관·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들은 지난 2년간, 통일외교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1차년도인 2013년에는 미·일·중·러 각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의 분단비용, 통일편익, 통일비용, 통일한국의 가치 등에 대한 논문형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이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할 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전략적 고려사항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인 2014년도에는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인식과 입장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한반도 분단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별 국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만이 아닌 1.5트랙 또는 민간 차원의 다층적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올해 3차년도 연구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주변 각국으로부터 맞춤형 통일 지지 논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미·일·중·러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1, 2년차 연구에서 더 나아가 대상국을 구소련 및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시켰다. 유라시아 대륙 차원의 한반도 분단비용 및 통일편익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통일외교 콘텐츠를 해당 국가에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확산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서의 서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제시 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한다.

II장 대(對)미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중국과 우방/동맹 국의 분쟁에 미국이 연루(entrapment)될 가능성을 예측해보며, 미국의 동맹·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적 상황을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대미 통일외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미국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할 논리(logic)를 넘어 인센티브(incentive)를 제시, (2)통일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과 논의수준 모색, (3)북한문제,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의 연계(link)와 절연(delink) 전략 마련, (4)한반도 통일 비전을 국내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완성, 주변국과 공유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구사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III장 대(對)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대중국 통일비용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한반도가 중국에 가져다주는 기여도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맞춤형 지지 논리의 개발방안을 제안한다.

IV장 대(對)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이 대일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V장 대(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국이 취해야 할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을 러시아 내 의견 그룹 및 정

부기관, 푸틴 대통령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1)러시아의 대북 및 남·북·러 협력 구상, (2)탈북자 대량 이주 등의 현안, (3)외교안보 논리의 세 차원에서 살펴본다.

VI장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對)강대국 외교실패 사례 분석에서는 탈소(post-Soviet) 국가들의 외교정향(diplomatic orientation)을 분석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초점을 맞춰 신생 독립국가들의 대강대국 외교실패 사례가 외교정향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VII장에서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통일담론의 구축과 확산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3년에 걸쳐 수행된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의 결과물로, 한국에게 한반도 주변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통일의 과업과 통일 이후의 민족적·국가적 통합의 과업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통일외교, 통일한국, 주변 4국의 통일인식, 통일편익, 통일비용, 분단비용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et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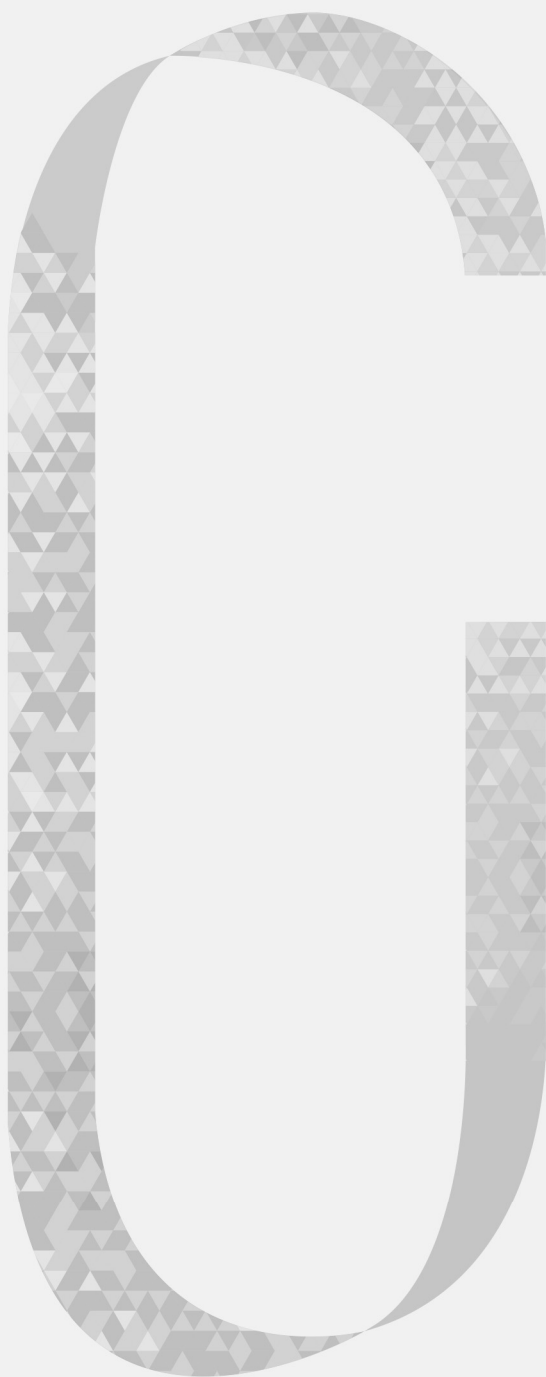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contents for unification diplomacy that aims to convince the political sphere, government, and citizens of the stat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o hold a positive outlook on Korea's unification.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s have been performing research to develop contents for unification diplomacy for the past two years.

In 2013, the first year of this project,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perspectives of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on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and presented a list of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Korea when establishing its diplomatic strategy for unification. In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identified the overall perception of key states on the divisio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sought to devise an approach that is favorable for a South Korea-led unification by forming a 1.5-track or multi-level communication structure at the civilian level.

This year, the third and final year of this project, the study aimed to develop a specific logic customized to each countr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o gain support for national unification. In addition, the research expanded the scope of countries for examination to includ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key European countries.

This report is for use as a fundamental source in devising a plan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ersuade Korea's neighbors. The researchers also hope that it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 in achieving unification as well as ethnic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Keywords: Unification Diplomacy, Unified Korea, Perception of the Four Key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Unification Benefits, Unification Cost, Division Cost



I. 서론

김진하
통일연구원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제협력 없는 평화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필요성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통일한국이 통일의 편익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국제사회에 심어 넣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외연이 북한 변화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과 협력을 강화하는 통일외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부터 공공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에 대하여 사뭇 대조적인 이해를 가진 미·일·중·러 동북아 4강국 및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정·관·민 대상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동북아 국제질서 및 전략 환경의 변화는 각 국에 특화된 통일외교 방향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지난 2년간, 아래와 같이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3년도¹⁾에는 4대국 주요 전문가들의 한반도 분단의 국제비용, 통일편익, 통일비용, 통일한국의 가치 등에 대한 자유기술식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통일외교 전략 수립 시 유의해야 할 전략적 고려사항을 강구하였다. 2014년도²⁾에는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별 국가의 협력을 모색

1)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

2) 배정호 외,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3~4.

하기 위해, 정부 차원만이 아닌 1.5트랙 또는 민간 차원의 다층적 소통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3개년 연구의 3년차 연구결과로서 그간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1)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반도 주변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맞춤형 통일 지지 논리 개발, (2)각국의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3)통일외교 콘텐츠를 해당 국가에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확산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즉, 주요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분단비용, 통일편익을 분석한 1, 2년차 연구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외교를 위한 실질적 콘텐츠 개발, 즉 주요국의 정·관·민 대상 맞춤형 통일 지지 논리를 개발하여 (1)주요국의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설득시킬 방안, (2)주요국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설득시킬 방안, (3)변환기에 있는 국제 안보·경제 질서의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설득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구성

이상의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제Ⅱ장 대(對)미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중국과 우방/동맹국의 분쟁에 미국이 연루(entrapment)될 가능성을 예측해보며, 미국의 동맹·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적 상황을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대미(對美) 통일외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미국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할 논리(logic)를 넘어 인센티브(incentive)를 제시, (2)통일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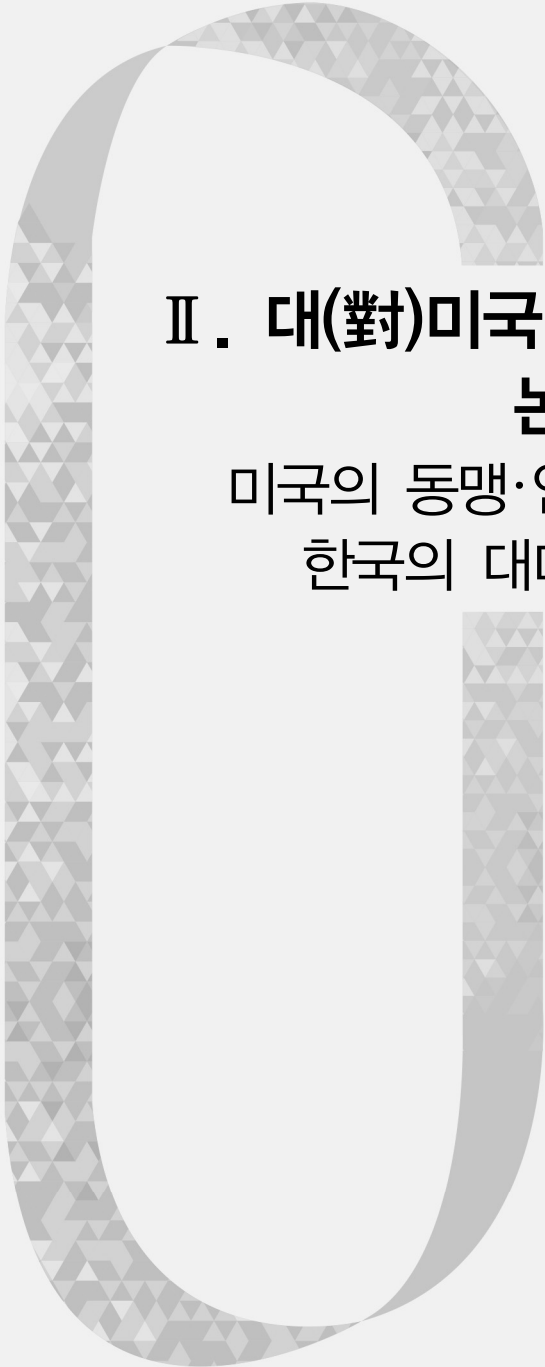
한 채널과 논의수준 모색, (3)북한문제,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의 연계(link)와 절연(delink) 전략 마련, (4)한반도 통일 비전을 국내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완성, 주변국과 공유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구사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제Ⅲ장 대(對)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대중국 통일비용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한반도가 중국에 가져다주는 기여도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맞춤형지지 논리의 개발방안을 제안한다.

제Ⅳ장 대(對)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이 대일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Ⅴ장 대(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국이 취해야 할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을 러시아 내 의견 그룹 및 정부기관, 푸틴 대통령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1)러시아의 대북 및 남·북·러 협력 구상, (2)탈북자 대량 이주 등의 현안, (3)외교안보 논리의 세 차원에서 살펴본다.

제Ⅵ장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對)강대국 외교실패 사례 분석에서는 탈소(post-Soviet) 국가들의 외교정향(diplomatic orientation)을 분석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초점을 맞춰 신생 독립국가들의 대강대국 외교실패 사례가 외교정향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Ⅱ. 대(對)미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미국의 동맹·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대미국 통일외교**

정 성 철
명지대학교

본 장은 미국의 글로벌, 아시아, 한반도 정책을 검토 및 전망하고 미국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원자로 만들기 위한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에서 자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 및 확장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동맹 딜레마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마주하는 안보 딜레마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미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일극체제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가운데 동맹/우방이 중국과 벌이는 분쟁에 끌려가는 상황을 예방하고 미중 간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마주친 연루와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완화 혹은 해소시키면서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중 사이에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비밀) 협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미 간 통일한국과 동아시아 미래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미국과 세계: 일극체제

글로벌 차원의 일극체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양차 대전 이후 등장한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와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등장한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 모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낯선 체제였다. 냉전기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을 지속하였다.³⁾ 다극체제 속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였

3) 예를 들어,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9), pp. 161~193; Manus I. Midlarsky and Ted Hopf, "Polarity and International Stabili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1 (1993), pp. 171~180. 세력전이 상황에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차별적 영향을 강조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Dale C. Copeland,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I
II
III
IV
V
VI
VII

기에 일군의 학자는 양극체제의 경우 주요 행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국가 간 의도와 능력을 둘러싼 오해와 오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대국의 수가 많을수록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 조합의 수가 늘어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양극체제의 위험성을 강조한 학자는 두 강대국의 국력 격차가 심화될 경우, 제3의 균형자 역할을 감당할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불균형이 발생하면 회복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면, 다양한 동맹 조합을 통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찾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냉전의 갑작스러운 해체 직후 양극체제의 ‘내구성’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낳았다. 결국 어느 체제가 안정적인지(stable)에 대한 논쟁이 어느 체제가 지속 가능성이 높은지(durable)에 대한 논쟁으로 변화하였다. 냉전이 종식되자 일군의 학자들은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 즉 (유럽에서) 다극 체제로의 회귀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 이에 따르면 일극, 다시 말해 글로벌 패권의 등장은 반(反)패권연합의 탄생을 야기하고 결국 힘의 균형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승리는 곧 미국의 쇠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쇠퇴론자(declinist)’에 맞서서 다른 학자들은 미국패권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⁵⁾ 우선 이들은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매우 압도적이라는

4) John J. Mearsheimer,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1990), pp. 5~56; Christopher Layne,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1993), pp. 5~51.

5) William 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1999), pp. 5~41; William C. Wohlforth, “Unipolarity, Status Competition, and Great Power War,” *World Politics*, vol. 61, no. 1 (2009), pp. 28~57.

사실에 주목한다.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다른 서구 강대국이 양차 대전을 겪은 상황에서 미국을 견제할 만한 국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제기한 것이다. 지역 수준에서 잠재적 패권에 대한 반대연합은 과거에 등장하였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실제적 패권에 대한 반대연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들 ‘우월론자(primacist)’는 미국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한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유지하는 ‘온정적(benign)’ 패권임을 강조한다.⁶⁾ 미국은 대륙국가와 영토국가가 아닌 해양국가이자 무역국가로서 영토의 병합을 통한 국력 강화가 아니라 교류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피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⁷⁾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정적인 답을 내놓게 하였으나, 최근 회복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를 선도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⁸⁾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 ‘미국이 과연 세계를 리드할지’가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리드할지’가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가운데 꾸준히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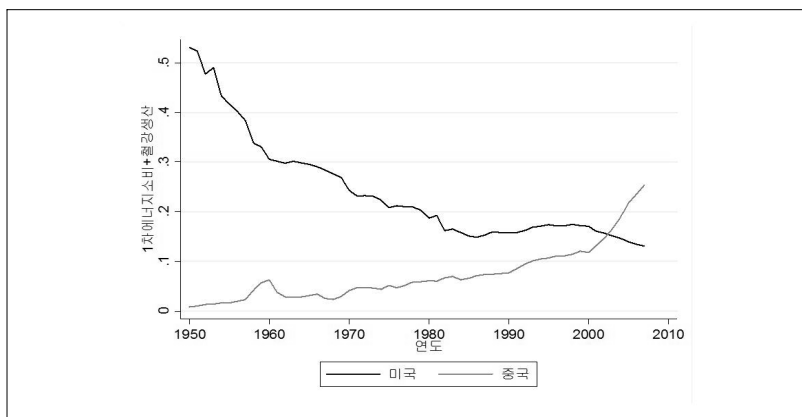
6) G. John Ikenberry,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7)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상이한 균형정책 채택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Jack S. Levy and William R. Thompson, “Balancing on Land and at Sea: Do States Ally against the Leading Global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7~43.

8) 미국의 자신감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잘 드러나고 있다. 2015년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 김현욱, “2015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04, 2015.3.4). 한편, 저명한 학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인 나이 역시 미국의 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2015).

력과 외교를 혼합하는 스마트파워론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우월론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역시 2008년 이후 공세적 외교를 통하여 주변국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켰으나, 미국과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이른바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원하고 있다. 비록 경제규모에 있어서 이미 일본을 추월한 중국이 2020~2030년을 전후로 하여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군사와 외교, 문화와 과학기술, 인구구성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을 대체할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림 II-1>과 <그림 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1차 에너지 소비와 철강 생산과 같은 경제력 관련 지표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되었지만 군사비와 군인수와 같은 군사력 지표에서 양국 격차는 1980년대부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에 기초한 미국의 세기가 지속된다고 본다면 어떠한 형태의 국제정치가 펼쳐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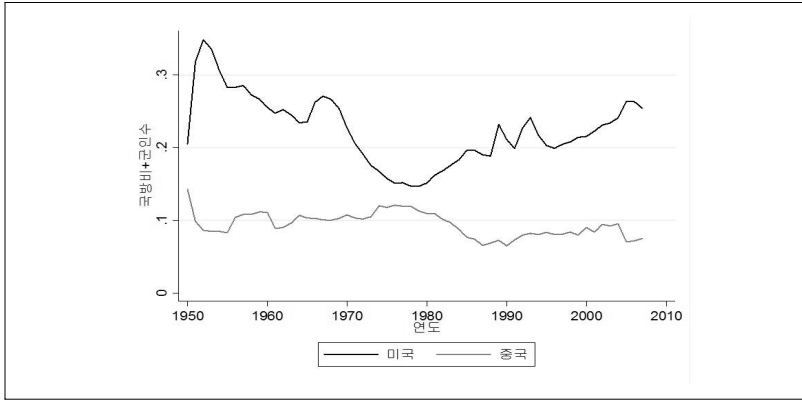
● **그림 II-1** 미중 경제력: 1차 에너지 소비와 철강 생산량



출처: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4.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의 정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 2015.11.16.); J. David Singer,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Peace, War, and Numbers*, ed. Bruce M. Russett (Beverly Hills: Sage, 1972), pp. 19~48.

○ 그림 11-2 미중 군사력: 국방비와 군인수



출처: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4.0),”의 정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 2015.11.16.); J. David Singer,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pp. 19~48.

우선, 21세기 일극체제의 모습은 미국이 글로벌전략과 상호작용을 펼치면서 전개될 것이다. 몬테이로(Nuno P. Monteir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일극체제 유지전략은 군사적으로는 (1)공세적 지배(offensive dominance), (2)방어적 지배(defensive dominance), (3)이탈(disengagement)을 생각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1)수용(accommodation), (2)봉쇄(containment)를 예상할 수 있다.⁹⁾ 그 중 미국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선택가능한 대전략은 군사적으로 방어적

⁹⁾ Nuno P. Monteiro, *Theory of Unipol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65~70.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지배를 경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어적 수용 (defensive accommodation)’이라 할 수 있다. 군사의 경우 ‘공세적 지배’를 실시하면, 반미연합의 결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탈’을 선택하면, 일극체제의 쇠퇴를 야기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봉쇄’할 경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미국을 신뢰하거나 따르는 국가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전략을 통하여 미국이 구상하는 대외관계는 무엇인가?

첫째, 미국은 자국과 강대국 사이의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면서 ‘공존’ 관계를 수립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강대국은 핵균형을 바탕으로 군사 위협은 낮고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의존성은 높은 이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서로 상이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 이해의 충돌로 인하여 중립이 반미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을 고립 혹은 봉쇄하는 방법으로 강대국을 적대국가로 만들지는 않으면서 ‘전략적 자제(strategic restraint)’를 통하여 이들과 더불어 자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유지 및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¹⁰⁾ 더 나아가, 미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다양한 갈등요인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강대국이 미국에 어떠한 (공동) 전략을 채택하는지가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이들 국가 역시 현존하는 국제질서 안에서 생존과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이 다른 체제를 구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미국은 비강대국의 강대국화를 경계하는 ‘관리’ 전략을 유지할

10) 강대국 혹은 패권국의 “전략적 자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 John Ikenberry,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것이다.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은 세력균형의 급속한 변화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국 주도의 세계 및 지역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지역통합은 바람직하지만, 급속한 일국의 군사력 증진은 잠재적 세력전이 가능성으로 인해 관리 및 통제가 불가능한 역내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현재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로 인한 동아시아와 중동의 상황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록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핵협상을 통한 합의점에 도달하였지만 각국의 국내 비준 결과가 불투명하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오랜 동맹과 우방의 부정적 우려와 반대는 미국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다.

셋째, 미국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테러 및 적대 행위를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압박’을 증가시킬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ISIL)로 대표되는 테러집단의 공격은 미국의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반미 테러리즘은 미국 일극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급진 이슬람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사그라질 현상은 아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의 적대행위는 일극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이들 테러집단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며 격퇴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동시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란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 근본적 이유도 이란을 활용한 이슬람국가 격퇴와 중동의 전반적 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요약하면, 미국의 21세기 글로벌전략의 목표는 일극체제의 유지와 안정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군사적으로 ‘방어적 지배’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강대국이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극의 존재를 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라크와 북한, 이란과 같은 비강대국의 도전은 존재할 것이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핵개발을 비롯한 강대국화를 적극적으로 막고자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도전에 대하여 직접적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행위자를 활용한 지역환경 조성을 통하여 격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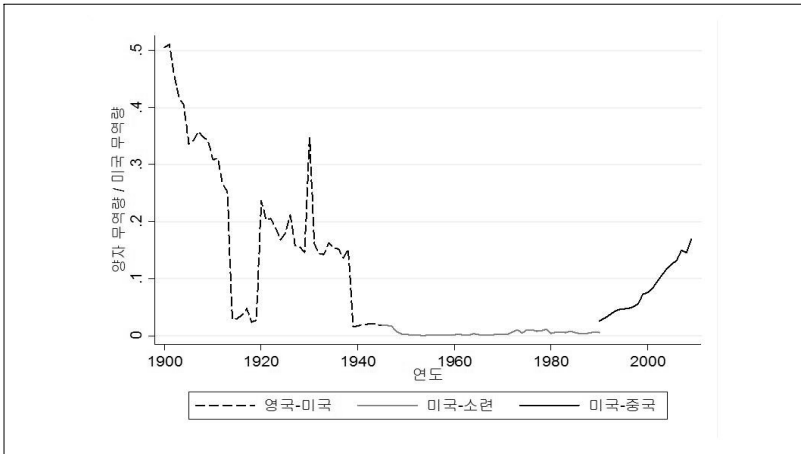
2. 미국과 아시아: 동맹 딜레마

미국에게 아시아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면서 미중관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하면서 미국 외교의 중심이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은 미중갈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미중 양국이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양국 관계의 파탄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하였듯이, 중국이 미국과 국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생존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약속하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중국은 일당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도부에게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양국 경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림 II-3>은 탈냉전기 중국경제가 대미 경제영향력에서 냉전기 소련경제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20

세기 초 영국경제의 대미 영향력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주적(主敵)으로 바라보고 사활적 대결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중관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중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요인(중국의 국내정치와 미국의 동맹 딜레마)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 **그림 II-3** 미국무역에서 양자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Bilateral Trade (v.3.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bilateral-trade>>의 정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 2015.11.16.); Katherine Barbieri, Omar M. G. Keshk, and Brian Pollins, “TRADING DATA: Evaluating our Assumptions and Coding Rul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6, no. 5 (2009), pp. 471~491.

첫째는 중국의 국내정치이다. 중국은 비록 권위주의체제이지만 국내 여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영합하는 외교정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책을 펼칠 수 있다.¹¹⁾ 그럴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에 대하여 중국이 공격적 혹은 적대적 입장을 취하여 중국의 대외관계는 예측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은 국내정치, 특히 국내여론과 절연된 상태에서 핵심멤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국내여론을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국내여론에 의해 ‘제한’된 모습도 존재했다.¹²⁾ 만약 중국 정부가 급속한 경제개발과 사회변화 속에서 부패와 불평등,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족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¹³⁾

하지만 과연 중국 정부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국내여론에 편승한 외교정책을 펼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비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과 국내 정치환경에서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민주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호전적이며 신중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이한 권위주의체제의 무력분쟁 행태를 분석한 워스(Jessica Weeks)는 모택동 이후 중국처럼 민간집단지도체제(non-personalist, civilian audience or leader)는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와 유사한 행동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한다.¹⁴⁾ 비록 권위주의

1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eter H.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12) Jessica C. Weiss, *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s Foreign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3) 국내불안과 국제분쟁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검토는 다음을 참조. 정성철, “관심 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5호 (2013), pp. 389~406.

14) Jessica L. P. Weeks, *Dictators at War and Pea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에서 워스는 분쟁을 개시할 확률과 분쟁/전쟁에서 패배할 확률을 중심으로

국가라 할지라도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지도자가 다수 국민은 아니더라도 정치·군사 엘리트층을 의식하면서 정책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책결과와 국내여파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개인 독재체제의 경우 지도자가 분쟁을 개시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손쉽게 즉흥적일 수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 주변국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공세적 외교를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안고 있는 동맹 딜레마이다. 상대적 쇠락국면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천명하면서 동맹 네트워크의 심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국내자원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내적균형(자강, military build-up)보다 외적균형(동맹, alliance)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라크 전쟁 이후 과도한 무력사용과 해외개입으로 인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상황에서 무력과 외교의 조화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동맹과 우방을 통한 영향력 유지와 확대는 동맹정치의 딜레마를 유발한다. 무정부상태에서 두 국가가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 동맹상대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방기(abandonment)’에 대한 두려움과 동맹상대가 우리를 불필요한 분쟁에 끌어들이 수 있다는 ‘연루(entrapment)’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¹⁵⁾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는 지역분쟁에 말려들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다양한 유형의 비민주주의국가를 비교분석하였다.

¹⁵⁾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80~192.

I
II
III
IV
V
VI
VII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미국이 동맹으로 인하여 아시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비클리(Michael Beckley)는 ‘연루(entrapment)’의 상위 개념으로 ‘얽힘(entanglement)’을 ‘국가가 동맹으로 인하여 국익과 상관없이 분쟁에 참여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다음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¹⁶⁾

- 첫째, 분쟁 중인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개입
- 둘째, 분쟁 중이지 않은 동맹국의 동맹신뢰를 고려하여 분쟁개입
- 셋째, 동맹국으로 인해 이익의 범위가 확장되어 분쟁개입
- 넷째, 동맹국으로 인해 제3국의 타깃이 되는 경우

위의 유형 중 첫 번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인데, 만약 대만과 중국 사이에 무력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개입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치면서 동맹강화와 확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아 동맹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믿지 못하는 경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익공유와 의지확인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 경우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동맹국으로 중동의 일부 국가와 이슬람 테러집단의 공격 혹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아시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미국의 동맹 딜레마에 대한 우려는 최근 들어서 ‘연루’ 혹은 ‘얽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연결된다.¹⁷⁾ 지난 10월 27일 미

16) Michael Beckley, “The Myth of Entangling Allianc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pp. 13~14.

17)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eds.,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I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의 12해리로 진입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곧 양국의 해군 수뇌가 군사회담을 가지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¹⁸⁾ 이처럼 미국은 아시아 동맹 및 우방과 더불어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억제하겠지만, 동시에 미중 간 무력 충돌의 방지라는 ‘목표(goal)’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¹⁹⁾ 제1차 세계대전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적 시각에서 1914년을 재조명한 편집서의 서문에서 밀러(Steven Miller)는 현재 미국이 맞이한 동맹외교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14년 국제질서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다. 본 책이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맹의 함정(entraping alliances)이다. ... 동맹을 둘러싼 동학은 1914년 상황에서 가장 독소적인 요인 중 하나이었다. 중국은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유일한 동아시아 동맹국인 북한은 중국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아시아 양자동맹 네트워크는 워싱턴을 역대 수많은 국가의 이익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중국과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거나 현재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 이는 동맹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이지만 미국의 지원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신뢰도는 약화될 것이다.²⁰⁾

18) “미·중 ‘남중국해 우발적 충돌 피하기로...’ “군사적 대화는 계속,” 『연합뉴스』, 2015.10.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20151030008651071.HTML?from=search>>. (검색일: 2015.11.6.).

19) Jane Perlez, “U.S. Admiral, in Beijing, Defends Patrols in South China S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3, 2015., <<http://www.nytimes.com/2015/11/04/world/asia/south-china-sea-navy-patrols-beijing.html>>. (검색일: 2015.11.6.).

20) Steven E. Miller, “Introduction: The Sarajevo Centenary-1914 and the Rise of China,” in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I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eds.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p. xxi.

I
II
III
IV
V
VI
VII

이처럼 미국의 원치 않은 분쟁에 대한 엄힘/연루와 관련한 우려는 향후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논의를 낳을 것이다. 우선 잠재적 적국 뿐 아니라 동맹국과 상대국의 상호 적대행위를 억제하는 ‘이중 억제(dual deterrence)’를 강조할 것이다. 즉, 북한과 중국의 도발과 공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동맹과 우방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 자국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는 역외균형자 논리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비롯한 지역강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글레이저(Charles L. Glaser)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타협(grand bargaining)’을 제안하였다.²¹⁾ 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철회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토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미군의 아시아 장기 주둔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자는 것으로, 오랜 친구인 대만을 포기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나아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미국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미국에게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차적으로 미국에게 (잠재적) 위협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미(美) 본토에 대한 위협은 높아지고 북한이 다른 국가와

21) Charles L. Glaser, “A U.S.-China Grand Bargain? The Hard Choice between Military Competition and Accommod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pp. 49~90; Charles L. Glaser, “Time for a U.S.-China Grand Bargain,” (Policy Brief,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July 2015), <<http://belfercenter.hks.harvard.edu/files/glaser-us-china-jul15-final.pdf>>. (검색일 2015.11.16.).

테러집단에게 핵과 미사일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개발로 인한 비강대국의 강대국화는 일극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에게 큰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란과의 핵협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가장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2012년 북한의 2·29 합의 파기 이후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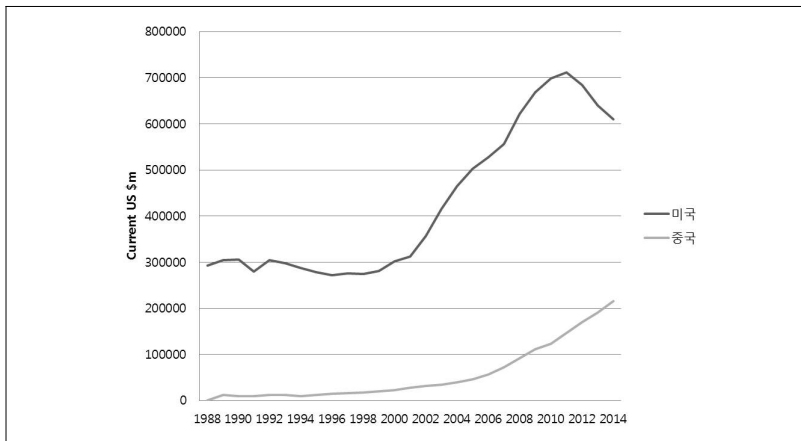
최근 미국에게 북한문제는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잠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이 향후 실전용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여 자멸을 자초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은 김정일 사후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가운데 북한 내 급변사태와 무모한 도발에 따른 역내 불안정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천안함포격침과 연평도포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중 간 북한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개입이나 한반도 통일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향후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은 북핵위협을 제거하고 핵확산을 가로막기 위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을 보호하고 미국 중심 동맹 네트워크를 견고화하기 위하여 북한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과 행동을 중국은 자국에 대한 위협 혹은 봉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혹은 위기상황에서 양국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안보 딜레마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의 국방비는 중국이 경제성장 속에서 꾸준히 증액하고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감액하면서 그 격차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그림 II-4> 참조). 한편 작년과 올해 미국의 한반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계획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양국 간 신경전이 발발했다. 미국이 점증하는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고려하자 중국은 이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한국과 미국을 당혹하게 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의 의도를 둘러싼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지만, 분명 한국 내 사드가 자국 군사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 긴장을 초래하자, 미국은 중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물론 미국은 동남아 지역 동맹과 우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을 견제하였지만, 중국의 확장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II-4** 미중 국방비, 1988~2014년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5,” <<http://milexdata.sipri.org>>의 정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 2015.11.16.).

그렇다면 미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 간 정보 비대칭 문제(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로 인한 오해와 오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외교정책 목표, 이데올로기, 체제타입 등 ‘국내 속성(domestic characteristics)’이나 군사정책, 국제기구, 과거행적 등 ‘행태(behavior)’를 통해 타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²²⁾ 과거 영미관계와 미소관계와 비교할 때, 현재 미중관계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접촉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국제기구가 위기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그림 II-5> 참조).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영향이 제한적이고 미중 양국이 서로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양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미중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와 오헬런(Michael O’Hanlon)은 한반도 문제(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미중은) 각자의 (북한 핵물질 확보와 정치질서 회복 등) 위기 대응계획이 위협이 아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서로를 확신(reassure)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베이징의 우려는 학자와 은퇴관료 사이의 투트랙(two

22)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 Sebastian Rosato, “The Inscrutable Intentions of Great Powe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3 (Winter 2014/15), pp. 48~88. 한편, 피어론(James Fearon)은 약속이행의 문제(commitment problem)와 더불어 사적정보의 문제로 인하여 합리적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고 설명한다. James D. Fearon,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 379~414.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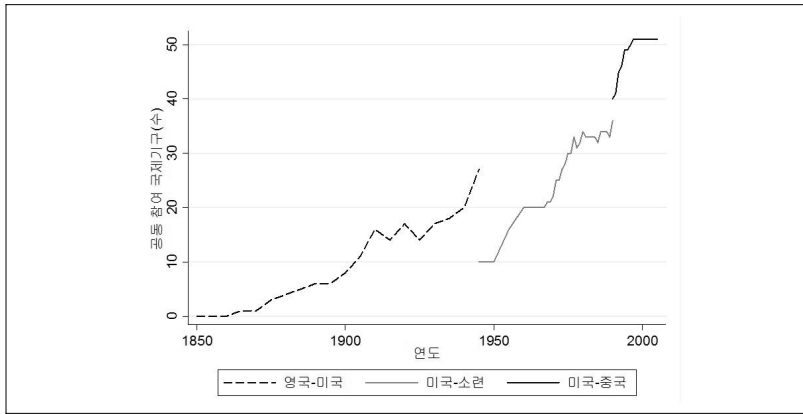
track) 논의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은 서울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이 미군 주둔을 원한다고 가정할 때, 워싱턴은 베이징에 대하여 미군의 규모가 지금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위치가 북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은 향후 위급상황 발생 시 적어도 북한 지역에서 중국을 초대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²³⁾

한편, 국제정치학자 키드(Andrew H. Kydd)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축소(혹은 종결)를 내놓는 구체적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어떠한 종류의 거래가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 중국은 북한 정권이 한국 측에 합류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권력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중국내 은신처를 제공하여 범죄재판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안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감시 속에 북한 내 핵프로그램을 즉시 해체하고, 비핵국가로서 핵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북한과의 통일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자국의 역할(role)을 감소하는 것을 동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거의 확실히(almost certainly)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아마도(possibly) (한미)동맹도 축소(scale back) 혹은 종결(eliminate)시킬 것이다. (통일)한국은 냉전 초기 오스트리아처럼 강대국 경쟁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중립화(neutralized)’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핵심 보상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이다.²⁴⁾

23) James Steinberg and Michael O'Hanlon, "Keep Hope Alive: How to Prevent U.S.-Chinese Relations from Blowing Up," *Foreign Affairs*, vol. 93, no. 4 (2014), p. 115.

● 그림 11-5 미영·미소·미중 공동참여 국제기구



출처: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v2.3),”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IGOs>>의 정보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 2015.11.16.); Jon C. Pevehouse, Timothy Nordstrom, and Kevin Warnke, “The COW-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ataset Version 2.0,”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2004), pp. 101~119.

4.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중 (비밀) 협상

상술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북한문제, 특히 북한 급변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중 협의와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미국이 아시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연루의 위협과 안보 딜레마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정책그룹 내에서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관심과 방안에 대한 미국 내부의 목소리는 반갑지만, 한국을 배제한 미중 강대국의 합의가 도출되고 실행되는

24) Andrew H. Kydd, “Pulling the Plug: Can There Be a Deal with China on Korean Unific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2 (2015), p. 68.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상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주도의 통일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강대국과 주변국이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고 북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남북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이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자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미중이 원하는 모습의 통일이 실현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친중(親中)보다는 친미(親美)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하에 ‘강한’ 통일한국보다 ‘약한’ 통일한국을 선호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우려와 반발을 고려하여 국경문제와 경제개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통일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중 협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미중 협의와 협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국력과 민족주의를 기준으로 6가지 유형의 통일한국과 대중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표Ⅱ-1> 참조). 우선 국력과 민족주의가 약할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에 대한 편승을 통하여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반대로, 국력과 민족주의가 강할 경우 통일한국은 중국에 대한 도전 세력이 될 개연성이 크다. 통일 한국의 대중 편승 혹은 도전 시나리오는 각각 미국의 역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이 희망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한국은 현재 남북한의 영토를 차지하고 일정 수준의 군사력과 경

제력을 보유한 건실한 중견국일 수 있다. 이러한 한미 간 논의는 미국 내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선호를 미국에 전달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 표 II-1 통일한국의 유형과 대중(對中) 정책

		국 력 (군사력·경제력·영토)		
		약	중	강
민 족 주 의	약	편승	연성 균형	잠재적 도전
	강	잠재적 편승	강성 균형	도전

출처: 저자 작성.

5. 한국의 대(對)미국 통일외교

미국은 글로벌 수준에서 일극체제의 지속, 아시아 수준에서 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 수준에서 미중 안보 딜레마의 해소를 추구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 협상에 따라 진행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대미국 통일외교의 구체적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 주도의 통일과 통합을 추진하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의 통일외교는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야 할 논리(logic)를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통일외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이 한반도 통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일을 통해 얻을 이익과 한반도 분단을 통해 지불하는 비용을 강조하는 작업에 집중하였다. 국가별 특징과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전통외교 및 공공외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²⁵⁾ 향후 통일외교는 미국을 설득할 논리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구상을 보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미국 경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선언적 지지를 할 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통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양국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과 다른 강대국 간 협상의 산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이 민족 문제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통일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문제가 아시아 불안정의 주원인이며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안정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통일한국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비핵과 평화를 추구하는 통일한국이 탄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국의 지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대화에 양국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되 통일한국이 안정과 번영이 아시아 국제질서에서 기여하는 바를 설득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독자적으로 북한문제, 한일관계 등에서 다양한 이슈의 연계(link)와 절연(delink)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핵위

25) 예를 들어, 배정호 외,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협과 북한인권을 연계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점증시키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인권논의를 체제위협으로 강조하고 핵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국은 양자의 연계 혹은 절연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게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를 안보·경제문제와 분리하여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반일 역사공조의 파트너가 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한미는 동맹이지만 북한과 일본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과 전략을 취할 수 없기에 한국의 목표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슈와 영역의 연계 및 절연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앞서 말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비전을 내부의 다양한 소통과 논의 속에 완성해 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유하여야 한다. 근대국가의 완성과 부국강병의 실현과 같은 19세기적 담론을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민족의 힐링’과 같은 21세기형 담론을 통해 전(全) 사회적인 통일 지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주변국의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인식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다.²⁶⁾ 현재 ‘통일대박(unification bonanza)’ 구호는 우리사회가 ‘국력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광복 10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 ‘자유와 번영을 넘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 자연스럽게 ‘국력 패러다임’으

26)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통일준비 노력을 언급하면서 남북한 이질성과 젊은 세대의 무관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지향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The New York Times*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s Peaceful Korean Unification Possible?,”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1, 2014.

I
II
III
IV
V
VI
VII

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을 단순히 ‘이익’ 관점이 아니라 ‘의미’와 ‘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가치 동맹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이다.



Ⅲ. 대(對)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백 우 열
성균관대학교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 되어 1989년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달리 ‘패전국’이 아니므로 주변 국가들의 ‘허가’가 국제법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법적 조건과는 달리 남북한의 통일은 주변 강대국,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최소한 암묵적이고 소극적인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 정치(realpolitik)의 조건이다. 한반도 통일은 대략 ‘국제법상의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비핵화 실현’, ‘통일 진입’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두 국가가 통일을 추진한다면 주변국들이 소극적인 반대를 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현 동아시아의 국제 안보 및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비용을 상정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통일한반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며,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미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본 장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맞춤형 통일 지지 논리를 개발하여 대중국 통일편익에 대한 재인식과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전체를 조망할 때 통일한반도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관련하여 개발한 통일외교 콘텐츠를 해당 국가에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중국의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설득시킬 방안을 개발하며 중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의 지도자와 대중에게 인지, 설득시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여 급격한 변환기에 있는 국제 안보경제 질서의

I
II
III
IV
V
VI
VII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외교적으로 중국과 다른 이해당사국들에게 설득시킬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1992년 역사적인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의 대중 통일외교의 배경과 발전을 검토하고 그 맥락에서 소위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을 평가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계산하고 있는 핵심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고 그 논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1. 대중국 통일외교의 배경과 발전

가.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의 역사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는 1992년 한중수교 시 공동성명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1992년 한중수교 공동성명 5조).”고 명시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와 지지 의사와는 달리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이 추구해온 한반도 통일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경원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노태우 대통령 집권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의 한국 정부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중국 통일외교를 펼쳐왔다.

위의 한국 역대 정권들의 대중국 통일외교는 중국의 당-국가 권위주의(party-state authoritarian regime) 지도자와 조직에 집중됐다.²⁷⁾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가 본격화된 이후 중국 공산당 정권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자주적·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왔으며,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음을 잘 인지해왔다. 즉, 북한의 국내 정치체제가 붕괴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러한 중국 지도부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전향적 정책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난 대중국 통일외교 역사의 기저에 깔린 한국의 의식이다.

그러므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 당-국가 지도부의 지지가 난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 36년간 글로벌 제국으로서 지역 내 핵심 주변국들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정치경제적 부상을 지속하고자 하는 ‘변동’의 상황을 활용하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현실화하는 동아시아 국제 여론 및 중국 국내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어려움은 중국의 정치체제의 유연성 향상이라는 ‘기회’와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다. 중국의 일당 권위주의 정권체제는 지난 36년간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한 부분적인 정치적·사회적 자유화로 인하여 국내 정책과 국제적 외교정책에 대한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일반 대중의 영향력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이들이 당-국가 시스템하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남북한 통일과 연관된 정책입안과 결정 과정에 미치

27)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85~101.

I
II
III
IV
V
VI
VII

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통일 문제에 대한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개인 시민들의 중국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이들이 중국 당-국가의 지도부와 사회 여론 주도층이 보유한 한반도 통일의 ‘대차대조표’ 상의 정책 방향에 다양성과 변화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

2010년대 중반 한국과 중국은 군사동맹을 제외한 양자관계의 최상의 관계 중 하나로 표현되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중국 중시 외교와 ‘동북아 균형자론’의 추구 등을 통해서 약화되었던 한미관계 복원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2012년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등장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소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는 변수로 인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힘의 구조 재편의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의 급격한 밀착은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을 요한다. 즉, 표면적 밀착성과 심층적 거리감,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한 동아시아에서의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심화와 정치군사적 상호갈등과 대결의 격화)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적어도 지난 3년간 정치적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양국 정부의 신정권과 거의 동시에 등장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인 대동아시아 정책이

I
II
III
IV
V
VI
VII

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신내각은 일본의 종합적 부흥을 위하여 경제, 정치, 외교, 사회의 전면적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와 외교의 측면에서의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1)영토분쟁(조어도·독도 분쟁), (2)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기본 축인 일본, 한국(북한), 중국의 갈등, 분쟁, 그리고 침략의 역사 문제 인식, (3)일본의 ‘정상국가화’와 군사적 재무장을 위한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이 직접적으로 추동한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의존과 급속도로 진행된 문화적인 교류와 이해와는 다르게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국제정치에서 ‘공통의 전선’을 갖지 못했던 기존의 상황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재부상하는 일본(reemerging Japan)의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외교정책은 한국과 중국이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인 협력이 가능한 공간(space)과 차원(dimension)을 발견하고 이를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²⁸⁾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정치적 공동 또는 협력 기조는 한국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간접적 군사협력국인 일본의 정치군사적 의구심을 야기할 정도로 심화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 분야를 제외한다면 아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호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교류 및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외교적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으며, 더구나 군사안보적

28)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인식하는 일본은 동아시아 정세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타파하고 자국의 세력권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현상타파(revisionist) 지역강국(regional power)인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환의 상황에 중층적으로 대응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현상타파(revisionist) 지역강국(regional power)이다. “한-중 정치적 근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선일보』, 2014.10.7.

관계는 아직 협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나아가 군사적으로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realism)적 측면에서 지역강국(regional power)이라기보다 중견국(middle power)에 가까운 한국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국제정치적 전략을 수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정치군사적으로 협력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을 핵심축으로 하는 ‘축과 부챗살(hub and spokes)’ 양자동맹 체제(bilateral alliance)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혼합적 정치군사 동맹에 대응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의 국제정치적 구조의 근원적 문제, 즉 한국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근본적’ 갈등구조는 ‘북한의 존재’이자 ‘한반도 재통일(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에 대한 다른 시각이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실패하였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의 ‘김씨 일가’의 권위주의 정권(The Kim Family Authoritarian Regime)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현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현상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이는 ‘통일대박’이라는 적극적인 통일추구 전략을 천명한 박근혜 정권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기도 한다. 결국 중국은 한국 주도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한국과 북한의 분단 구조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의 국제정치적 논리이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된다면 ‘통일한국’의 국제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는 근본적인 재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기본적 국제정치적 구조는 한반도 통일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모든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다.

2. 대중국 통일외교의 논리: 비용과 편익²⁹⁾

가. 한반도 통일로 인한 중국의 비용

거시적으로 분석할 때 중국은 현재 한국이 추구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은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할 때 친미적이며 반중적인 통일한국의 등장을 상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은 미국의 영향과 동맹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주도의 체제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구적인 중립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일한국의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국력은 중국이 미국, 일본, 러시아 이외에 어렵게 다뤄야 할 또 하나의 지역 내 강국(regional power)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일한국은 중단기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회복과 통합 등의 문제 해결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여러 핵심 이익들과 협력과 대립을 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 레짐을 구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³⁰⁾

29) 기존의 종합적 논의는 다음의 연구 결과 참조. 배정호 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배정호 외,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참조.

30) “The North Korea Contingency: Why China Will Not Cooperate,” *The Straits Times*, August 8, 2014.

I
II
III
IV
V
VI
VII

- (1) 비용1: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장 큰 비용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대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완충지대(buffer zone)³¹⁾ 기능의 상실이다.³²⁾ 이는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전략으로서 중국의 가상 적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현재 이들과 군사동맹 또는 가상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한국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해준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 분단의 편익이며 한반도 통일 시에는 이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상정하여 비용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중국의 일반적 시각이다. 중국의 부상 이후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존재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in Asia)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도 기능하고 있다.³³⁾ 한반도 분단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투어 왔던 일본의 정치군사적 한반도 진출 또한 억제해주고 있다.
- (2) 비용2: 비용1과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 전체적인 역학구조상 한반도 분단은 미국의 대만과 관련된 안보 역량 및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게끔 하여 미국이 중국과 대만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편익을 중국에 주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시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 (3) 비용3: 분단된 한반도는 중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인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남북한의 경쟁을 활용할 수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또

31) 중국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2015.5.15.

32) Robert E. Kelly, "China's Interests in Korean Unification: How Much Longer is the 'Buffer' Worth It?,"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9, no. 2 (2014), pp. 4~20.

33) 역으로 북한으로 인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적대적 상호의존(hostile interdependence) 논리이다.

한 한반도 분단을 통해서 중국은 북한을 한국 및 미국과의 다양한 정치군사적인 협상에서 협상 카드 또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 적지 않은 비용으로 책정된다.

(4) 비용4: 중국이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보다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90% 이상)이다. 이는 중국에게 큰 비용을 야기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영향력 행사 국가의 지위라는 편익을 제공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러한 절대적인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할 여지가 많다.

(5) 비용5: 한반도 통일 시 중국은 북한의 폐쇄경제 등의 정치경제적 약점으로 인하여 확보하였던 북한 지하자원 및 제반 경제산업에 대한 독점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와 같은 한반도 통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현재의 한반도 분단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국가이익이 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 구도를 ‘화석화’해서 보기 때문이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지정학적·지경학적 변동이 가져올 부정적인 가능성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가능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⁴⁾

³⁴⁾ Jonathan D. Pollack, “Is Xi Jinping Rethinking Korean Unification?,” (Presentation Paper, 3r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ecurity-Brookings Joint Conference, January 20, 2015), <www.brookings.edu/research/presentations/2015/01/20-xi-jinping-korean-unification-pollack>. (검색일: 2015.11.16); “China Wouldn’t Mind a Unified Korea—Just Not Yet,” *The Atlantic*, January 25, 2013. 정도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용/편익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 한반도 통일로 인한 중국의 편익

중국이 한반도 통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 편익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한반도의 통일상황이 진행될 때 실현되는 것으로 그 불확실성이 그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굳이 변화시키는 모험적인 정책적 변화를 중국이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들은 비용들을 넘어설 정도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비용이 주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면 편익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1) 편익1: 한반도 통일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근본적인 안정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 중국의 동쪽,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안정이 확보된다.
- (2) 편익2: 한반도 통일을 통한 경제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인 중국의 동북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급속한 경제발전 달성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까지 중국의 경제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해를 통한 태평양으로의 해양진출 경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북한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단기적으로 중국의 인프라 및 기타 산업의 엄청난 수요를 가져온다.
- (3) 편익3: 한반도 통일에 협조함으로써 중국 자신의 논리적인 일관성 확보와 대만과의 통일 추진력 강화가 가능하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은 반대하거나 저지하면서 대만과의 통일을 사활이 걸린 국가이익으로 추진하는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다.

- (4) 편익4: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적 도전과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5) 편익5: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이 북한의 국내상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상황으로 진행될 때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그 비용을 전가하거나 또는 분배할 수 있다.³⁵⁾
- (6) 편익6: 한반도 통일을 통해 중국은 국제적 평화 추구의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자신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향상시킬 수 있다.

3.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략³⁶⁾

가. 한국과 중국의 정치군사적인 거리 좁히기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편익’과 ‘비용’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치군사적 이슈는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와 배치 지역, 그리고 통일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유지 여부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체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며 한반도에

³⁵⁾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북한 비용을 극도로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³⁶⁾ 기존의 종합적 논의는 다음의 연구 결과 참조. 배정호 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참조.

I
II
III
IV
V
VI
VII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고자 하는 한국에 가장 큰 정책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동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소극적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한국의 점진적 ‘중립화’가 가능한 대안일 수도 있지만 여러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³⁷⁾

이 문제에서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의 현실적 대안은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중국의 정치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현실적 행위를 반복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 전략적 방향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한미동맹을 넘어선 한일동맹의 현실화를 지연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미·일·호의 4자 가상동맹(virtual alliance)과 같은 형태의 미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군사동맹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보하며, 미국 중심의 대중국 정치군사적 봉쇄정책에 대한 참가와 불참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를 비롯한 중국과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현재 미국, 일본, 호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아시아의 인도까지 연결하는 중국 봉쇄 벨트에 대한 참여를 유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아래 한국은 중국과 양자 간이 아닌 다자간의 군사훈련까지 실시할 수 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정치군사적인 정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로 인한 미국의 ‘비용’을 급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대

37) 이것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붕괴가 없다는 전제하의 전략이다.

38) 중국의 정책커뮤니티에서 낮은 수준의 ‘한중군사동맹’ 수립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쇄통, 『역사의 관성』 (북경: CITIC Press, 2013).

한 압력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현재의 한국과 통일한국은 향후 오프쇼어 강대국(off-shore superpower) 이론에 기인한 한미동맹의 정치군사적인 편익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유발하는 정책적 방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거리 좁히기 정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편익과 비용 구조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의존한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2)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대중 전략인 정치군사적인 거리 좁히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에 대한 대응은 사안별로 다르게 ‘대미·대중 조화외교’의 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³⁹⁾ (3)정치군사적 의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의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대화채널은 양국 관계의 단기적 부침과 상관없이 계속 확대되어 정치군사적, 예를 들어 외교전략대화와 국방 전략대화를 2+2 전략대화로 격상시키는 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나. 정치경제적인 거리유지 및 경제의존도의 균형화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한중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 8천만 달러에서 2014년 2천 353억 7천만 달러로 약 37배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27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4년 1천 453억 달러로 증가하여 지난 22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동일 기간에 37억 달러에서 901억 달러로 연평균 16% 정도의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한국의 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92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25.3%로 지속적으로

39) 김규륜 외,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I
II
III
IV
V
VI
VII

증가하여,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의 대중국 정치경제적 협상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만든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한국이 ‘중국’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과 한반도가 처해있는 ‘제국들에 끼어있는 중견국’의 상황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구한말 ‘중국(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사이 상황과 다른 점은 한국 자체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종합 국력이 당시의 조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과 한국의 선택 옵션이 단지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중국과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인도, 브라질, 이란,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과도 전략적 협력과 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그렇다. 한국 정부는 정책적 시야를 동북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 조건이지만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미미하다.

한국의 (중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경제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정치군사적 자율성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경제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넘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동북아 안보구도의 대립구도로 고착화 방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종합적 연구인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구도로 발전할 때보다 협력구도로 발전할 때 한반도의 통일,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커진다.⁴⁰⁾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증대할

수록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제한되며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협력도 어려워진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국외교의 하위 정책으로 설정되었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도 기존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에서 대중국 정책의 하위 정책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세계 차원의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⁴¹⁾에서 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과 한반도 통일 관련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한국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게 되어 양 강대국의 결정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와 북한과 중국의 동맹 관계가 아무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기반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전 세계적 차원의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협력 구도의 하위전략의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구도는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논의가 한국과 북한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 제2의 ‘가츠라-테프트 밀약’과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⁴²⁾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대립하는 구도를 막을 수 있는 국력은 없지만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재자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등이 필요하다. 비슷한 논리로서 한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2011년 10월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격상됨)’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 전자가 강해지면 후자가 약해진다는 제로섬(zero-sum)적 접근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분석에 기인하고 여러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40) 황병덕 외, 『중국의 G2부상과 한반도평화통일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41)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8).

42) “Kerry to Discuss Korean Reunification with China,” *The Chosun Ilbo*, February 4, 2014.

I
II
III
IV
V
VI
VII

그러나 이것의 프레임을 자유주의적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해내야 한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미중관계가 상호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재설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미·중 3자 협의체 등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봉쇄하는 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기존의 한미동맹이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접근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즉, 중국,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가상적인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본격화되어 여러 형태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어느 한쪽에 편승(bandwagon)하거나 연루(entrapment)되지 않도록 하는 ‘조화외교’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현이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결국 미중관계의 단기, 중기, 장기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조화외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만약 한 축에 어떠한 형태의 국가이익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³⁾

43) 김규륜 외,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pp. 146~161 참조. 대미·대중 조화외교의 유형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되면서,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례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1)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한중 FTA지속 추진, (2)박근혜 정부의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일본 정치군사적 재부상 억제’에 대한 한중 공조, (3)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정책’, (4)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에 대한 유보이다.

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치군사적·경제적 공조체제 구축

북한 김씨 권위주의 정권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부재하고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지난 2년여간 보여준 권위주의 정권의 후계 권력 이양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 이러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이는 현실적인 수단이 결여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붕괴 유도 작업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중국과 미국이 공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의 비확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한국도 이러한 정책적 상황을 암묵적으로 주어진 조건(given condition)으로 상정하고 북한 핵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향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가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과 더불어 미국도 2010년대 중반 대북한 정책의 핵심 기조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 핵의 비확산을 설정하며 현상유지 및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북미관계의 개선 또는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핵능력 증강 또는 미국의 핵우산 강화밖에 대안은 없으며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내외의 핵우산을 강화하는데 따른 간접적인 미국의 대중국 핵능력 감시 또는 억제 능력의 강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정책적 기조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장기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북한의 핵무장을 실질적으로 인정했고 북한은 이 핵무기를 포기

I
II
III
IV
V
VI
VII

할 어떤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한국이 북핵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고자 중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외교적·정책적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겠다.

현재 북한은 정치적으로 복합적 권위주의 정권이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주도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기층 수준에서의 ‘장마당’체제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김씨 일가 독재 정권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제3대 세습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많은 주변국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정책결정과 실행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세력은 여전히 엘리트층의 권력 투쟁과 정리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권력 투쟁이 격화될 여지가 있어, 권위주의 정권들의 주요한 특성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개방과 개혁을 결정, 실행할 때 발생할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정보와 자본 유통에 따른 사회불안정 요소와 외국의 영향력 확대 및 개입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적극적 정치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경제개혁과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최악의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국제적, 그리고 한반도 남북한적 정책수단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정치안보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과 중국이다.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에 관심이 있는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도 각각 북핵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 납치인 문제, 한국과의 경제적인 협력 어려움 등의 정치안보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그

렇다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주체는 한국과 중국일 수밖에 없으며 국제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를 중국의 관여 또는 개입 없이 촉진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이 북한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과 결과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 개방과 개혁을 위한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 합의: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2000년대 중후반 까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10개국, 한국이 공히 경제적 교류와 동반 성장을 약 3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국제정치경제적인 구조는 ‘정치안보’와 ‘경제’ 정책 분야의 분리원칙이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정치안보에 있어 급격한 경제적,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군사적 부상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여 비공식적 중국봉쇄정책을 준비해 온 미국과 일본의 수면 밑 갈등은 상존하였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정책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201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정치군사력(power)과 경제력을 혼용하고, 분리원칙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각 국가 간의 경제적 갈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정치경제를 유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도 대북정책에서 정치안보와 경제 정책 영역을 혼용하는 정책 기조를 2000년대 후반 본격화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이 정치안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양한 경제제재 조치(중국의 대북 에너지 및 식량 원조의 일시적 축소, 북한 내 중국 투

I
II
III
IV
V
VI
VII

자에 대한 견제 등)를 사용하여 압박을 가해왔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패턴이 유지된다면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개방과 개혁을 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는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정권의 속성상 절대 소수 집권 엘리트의 실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실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논리적 사고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국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⁴⁴⁾ 한국과 중국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협정(북한도 포함)인 ‘북한의 경제재건과 동북아시아 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와 경제 분리원칙 협정(가제)’을 맺을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화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난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근본적인 신뢰구축의 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평화적 또는 북한의 여러 형태의 분열 상태 등에 기반을 둔 통일 프로세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신뢰가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 정권이 생존하든 붕괴하든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한 각각의 경제이익 추구하고 더불어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재건을 ‘함께’한다는 원칙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 (2) 한국과 중국의 대북한 직접투자 재개 및 확대를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원조)과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그러나 양국 공히 대북한 직접투자에서 북한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특히 소유권(property rights)과 정치안보적 상황에 따

44) 러시아와 일본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른 예측할 수 없는 외자기업에 대한 대우가 큰 문제임을 공감하고 있다. 위의 ‘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중국은 공동협의를 설립하여 대북한 직접투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행을 북한 정권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동시에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을 참여시켜 북한과 다자적인 형태의 협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당연히 북한 권위주의 정권은 이에 대해 다양한 ‘편익’과 ‘비용’을 상정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정권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되는 중단기적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는 정권이 안정된 북한 내부적으로도 (자본주의) 경제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 중 결여된 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동북4성론’, ‘흡수통일론’ 등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함의가 큰 한 국가에의 경제의존이 아닌 복수의 국가들, 특히, 한국과 중국을 함께 끌어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미얀마의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이 정치군사적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국-일본으로의 균형이라는 ‘배신’에 동남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타격을 입은 중국은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적용을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수단으로 실현할 기회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중국이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실행해 온 ‘착취적 해외직접투자’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확보해준다. 이 또한 궁극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통일과정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신뢰하고 타협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키워줄 수 있다.

I
II
III
IV
V
VI
VII

(3) 한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경제권 발전 구상의 공동협의체 설립: 중국은 현재 자국의 동북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경제성장의 부진이 큰 고민이며 한국은 서해안 지역의 경제정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북한이 계획하던 경제특구들을 묶어내는 공동 경제발전 구상이 필요하다. 역시 이는 현재 ‘일대일로’라는 ‘서진정책’으로 확실히 전환한 중국의 국내-국제 경제발전 전략에서 소외된 지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중국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NEADB)’의 설립은 한반도 통일의 이해당사국들 중 중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관건은 한국이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국제정치적 협조와 타협을 어떻게 ‘조화외교’의 틀 안에서 만들어 가는가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중국의 정책적 전환은 한국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향후 그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첫 번째 제시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정책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와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것이 이 정책적 제안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하겠다.

마. 통일공공외교⁴⁵⁾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 외교정책에서 또 하나의 경로는 바로 공공외교이다. 현 중국의 당-국가 중심의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 NGO(비정부기구)와 한국 NGO의 직간접적인 교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양국의 시민들 간의 교류를 통한 ‘통일공공외교’는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거주 또는 왕래하는 약 100만 명의 한국 교민과 200만 조선족을 공공외교의 매개체로 육성하는 전략도 추진해볼 만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한 단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국에서 중국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외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국적 및 한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들은 자신이 중국인에 비해 한반도 통일로 인한 여러 이해관계의 당사자임을 인지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중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여러 주체들이 활용하는 자산은 문화 및 예술, 경제, 그리고 지식 분야의 자산이며 중국 시민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경로는 한국의 상품, 드라마, 대중음악, 여행을 통한 경험이다. 이렇게 한국을 이해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위에서 제시한 공공외교 자산들을 활용하여 중국 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입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5)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백우열,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3호 (2015), pp. 115~142 참조. 특히 통일공공외교 관련은 pp. 133~136 참조.

I
II
III
IV
V
VI
VII

중국의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외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 통일공공외교의 핵심은 지식외교다. 민간공공외교가 수행되기 어려운 중국공산당 중심의 통제정치 체제를 가진 중국에서 민감한 행위로 취급되는 한반도의 통일공공외교는 정부, 정책커뮤니티, 학계, 언론계의 정책결정자들과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진출한 대규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을 통한 일반적인 대중 공공외교 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통일공공외교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1.5트랙/트랙2와 같은 전략대화, 관련 한중학회교류 지원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하여 북한 핵 또는 한반도 핵문제 논의와 해결을 넘어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과소평가된 ‘편의’와 과대평가된 ‘비용’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대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예로서 들 수 있는 것이 2013년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제안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고 매년 양국의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실시하는 외교 행위는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 자산을 통한 대중 통일공공외교의 큰 성과라고 하겠다.

대중국 통일공공외교 중 지식외교의 구체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인 중공 중앙당교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길림사회과학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중국국제전략학회,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개혁개방논단, 그리고 학계 싱크탱크인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등이다.

위에서 제시된 중국 정부 산하의, 그리고 각 대학 내의 싱크탱크의 핵심 인력들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에 필요한 관점들과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이는 양방향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대한반도 및 대한반도 통일 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싱크탱크들은 이 정책을 구체화하고 전파한다. 여기서 하나 정책적으로 개선할 점은 한국의 대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지식외교’가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의 정부 및 대학 싱크탱크들에 편중되어 있고, 소위 ‘지한파’ 일부 인사에 집중되어 온 점이다. 이러한 활동이 지식공공외교라기보다 제한적인 교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워싱턴의 일부 ‘지한파’ 인사들에게만 집중, 그 효율성과 확장성이 제한되는 문제와 유사하다. 위의 핵심 기관들과 더불어서 중국 각 지역 내 한반도 통일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공공외교의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이해당사 지역이 될 중국의 동북3성, 즉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핵심 정부 및 대학 싱크탱크, 그리고 지방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확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당-국가체제에서 핵심적인 외교정책 결정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위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와 이를 보좌하는 당과 국무원 직속 기관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공외교적’ 접근은 난망하며 이는 양국의 정무외교관계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언론의 경우 기존 관변 미디어를 비롯하여 민간 영역의 미디어 여론 주도층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공공외교를 통해서 기존 정부 영향하 미디어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민간미디어 여론주도층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

I
II
III
IV
V
VI
VII

화하면서 ‘지한파’ 또는 ‘친한파’ 시민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망

대중 통일외교의 향후 발전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국내적·국제적 정책 방향과 실행이다. 대중 통일외교 실행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거리 좁히기는 결국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점진적 발전 또는 급격한 악화가 유발된다. 후자의 경우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국지적 도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북핵 4차 실험’ 등의 북한의 군사적 침략이 발생하면 점진적으로 발전된 정치군사적 신뢰가 단번에 무너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편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북한의 예측이 어려운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양국의 정치적인 거리 좁히기는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명확하다.⁴⁶⁾

그러나 대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은 바로 통일한반도의 이해당사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편익’과 ‘비용’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상충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이 상충하는 각국의 ‘편익’과 ‘비용’의 중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추후 필요하다.

46) 배정호 외,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p.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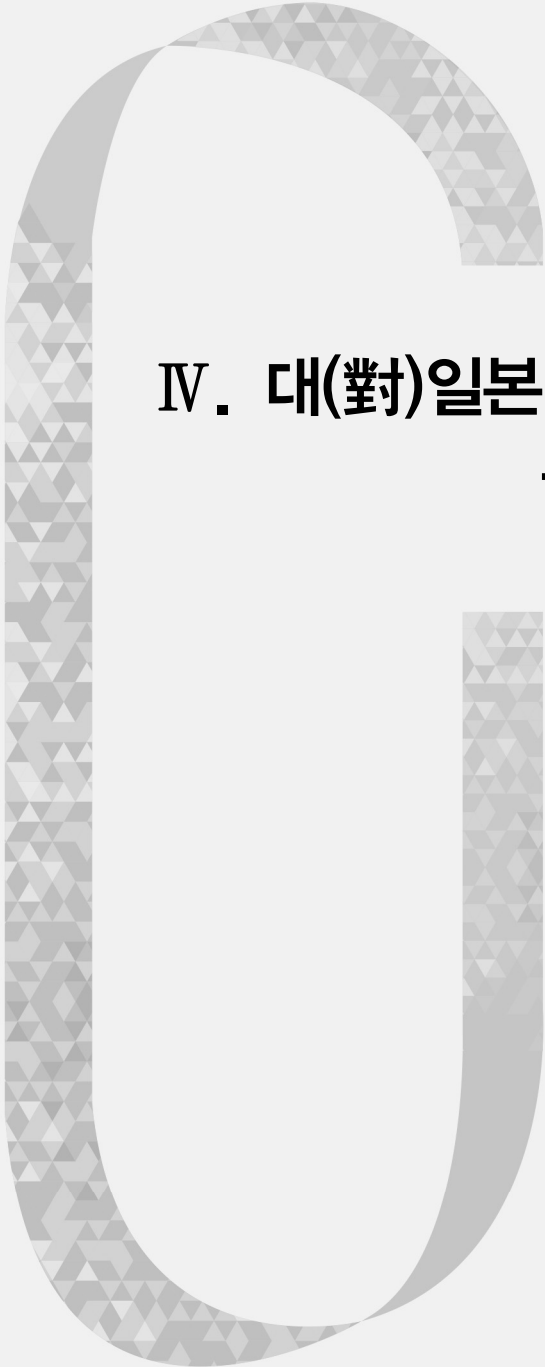
중국이 원하는 통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일본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1)동아시아 국제안보레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여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2)통일 후 주한미군의 철군 또는 이에 대응하는 주한 중군의 대칭적 한반도 내 배치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중립지대화를 전제로 하고, (3)핵심이익인 중국과 대만의 통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원하는 통일: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1)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한국의 수립과, (2)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내 주도적·우월적 지위 유지 및 동아시아 안보레짐의 현상유지를 확보하며, (3)한미동맹의 유지를 통한 중국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도전을 방지하며, (4)통일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원하는 통일: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 통일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통일’과 대동소이하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 통일한국의 경제적 경쟁자로서의 발전, (2)통일한국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의 가능성을 통한 군사적 강국으로의 부상, (3)통일한국의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한 미일 군사동맹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 등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한반도 통일 당사국들의 일치 또는 상충하는 편익과 비용 구조가 가장 복합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통일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I
II
III
IV
V
VI
VII



IV. 대(對)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이 기 태
통일연구원

1. 연구 목표 및 구성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견제 및 협력이라는 글로벌 강대국 간 경쟁과 지역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상호경합이 맞물려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 속에서 일본은 냉전기부터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일본의 이익 추구와 영향력 유지 및 확대라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과 함께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일본의 전후체제 완성 및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라는 국내 정치적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등 여러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에 대처하며, 특히 한국과의 안보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여러 현안은 양호한 한일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 및 역사 문제를 바탕으로 한국이 친중국으로 경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결국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를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구조 변화는 한국의 통일 노력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이 대일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목표를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공동성명을

I
II
III
IV
V
VI
VII

중심으로 알아보고, 공동성명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대 일본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제2차 아베 정부(2012년 12월~현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후에는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자민당 내 주류파별인 ‘보수우익’ 파벌(호소다파)의 성향과 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한국의 자민당 파벌에 대한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을 일본인 납북자, 북핵문제,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통일이라는 네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현안들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대일본 통일외교의 목표 및 내용

가.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 목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 첫째, 한일 우호관계의 유지이다. 냉전 시기에 한국은 공산세력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냉전 이후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같은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안보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비록 지속적인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 누적과 같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만, 일본의 직접투자 및 기술협력 제공과 같은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분쟁 요인의 관리이다. 외교안보적·경제적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한

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든지 갈등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분쟁 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 역시 한일 간 갈등 요인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양국 간 현안 문제는 단기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찌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 측면에서 한일 간에 상존하고 있는 분쟁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앞서 얘기한 외교안보적·경제적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대일본 외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70년 동안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 대공산권 견제 및 억제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안보적 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보수우경화 분위기에서 한일 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냉전 이후 한국의 대일본 외교와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한일협력을 위한 ‘한일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곧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앞서 남북한 간의 평화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여 햇볕정책에 기반을 둔 남북한 평화공존이 통일보다 중요하다는 통일관을 피력했다.⁴⁷⁾

47) 대통령 비서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서울: 대통령 비서실, 1999).

I
II
III
IV
V
VI
VII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부 출범 초기에 대북정책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⁴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 이후인 2006년 4월부터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2007년 10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고, 후쿠다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후쿠다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와의 불행한 과거 청산 및 북일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일본 측 방침을 설명했다.⁴⁹⁾

한국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 우경화 경향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 및 일본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⁵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일본의

48) 일본 외무성, “한일정상공동성명: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향한 한일협력기반의 구축,” 2003.6.7.,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03/j_k_seime.html>. (검색일: 2015.10.19.).

49) 일본 외무성, “한일공동프레스발표,” 2008.4.21.,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visit/0804_2_pr.html>. (검색일: 2015.10.19.).

50)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 초에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이명박 정부까지의 대일본 통일의교를 분석 시기로 한다.

반응을 알기는 쉽지 않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정상회담 수준에서 언급된 통일 외교와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협력,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 간 상호 공감대 형성의 문제였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한일 간 공동성명에서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양 정부가 통일보다는 남북의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통일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굳이 한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를 한국의 대일본 외교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대북정책 지지 확보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일본 외교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자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대일본 통일외교는 한국 정부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 및 그에 따른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직접 언급되는 경우는 없었다.

나.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김대중 정부 이후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⁵¹⁾

첫째,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대

51) 이기태 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9~20 내용을 재정리.

I
II
III
IV
V
VI
VII

중-오부치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한다.”라는 내용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와 같은 남북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가 강조되었다. 김대중-오부치 및 노무현-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일 간 인식의 공유가 잘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양국 간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2012년 이명박-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이산가족 재회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⁵²⁾

넷째, 한국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지지하고, 일본은 남북협력 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환영한다는 것이다.⁵³⁾ 이것은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는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한일 양국이 지지하면서 나아가 남북한 통일도 일본이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가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대일본 통일외교 내용을 담고 있다.⁵⁴⁾

이처럼 일본이 이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는 어느 정

52) 일본 외무성, “한일정상회담(개요),” 2012.5.13., <http://www.mofa.go.jp/mofaj/area/jck/summit2012/jk_gaiyo.html>. (검색일: 2015.10.19.).

53)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서울: 한울, 2011), p. 29.

54) 이기태 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p. 20.

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지만, 일본 국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의 2011년 여론조사는, 일본 국민의 39%가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⁵⁵⁾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 및 그 과정에서 우호적인 일본의 정책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일본의 정책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각계각층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과 대외정책 결정 과정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에는 여러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이나 미일 간 공식문서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이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통일 논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한일관계의 특수성이다.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를 전개하는데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협력, 경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과 따라 한국의 한미동맹 및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과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사이에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 간 갈등 요인은 언제든지 표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셋째, 남북한 대치상황이다. 일본은 북핵문제

I
II
III
IV
V
VI
VII

55) “日中韓 共同世論調査 信頼感 中韓と温度差,” 『読売新聞』, 2011.11.12.

에 대한 한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전후(戰後)부터 꾸준히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해왔다. 때로는 한국, 미국과 상관 없이 독자적인 대북 접근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남북한 대치상황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 외교 접근은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3.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 인식

가. 일본의 한반도 정책 기조

역대 일본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본방향은 ‘한반도 안정화’이다. 여기서 ‘한반도 안정화’는 한반도의 분단상태 지속이라는 점이 아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⁵⁶⁾ 이러한 안정된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일본은 안보적 위협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고, 전후 일본이 추구해온 경제성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2012년 12월, 아베 정부 수립 이후 일본이 보통국가화 및 군사대국화를 추구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보통국가’에 있는 것이고,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찬의 견해에 따르면, 전후 일본의 국가노선을 ‘미일동맹 유지 여부’와 ‘평화헌법 개정

56) 이기태는 냉전 시기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후자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외교’ 및 ‘군사안보’라는 두 트랙 접근을 통해 대한국 안보협력 정책을 전개했다고 주장한다. 李奇泰, “米国の東アジア政策と日本の対韓安全保障政策: 在韓米軍撤退問題と日韓安全保障協力の模索, 1969~1979,” (慶應義塾大学博士学位論文, 2012).

여부'를 기준으로 네 가지 국가노선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미일동맹을 폐기하고 평화헌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냉전 시기 혁신세력이 주장하는 '평화국가' 노선,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전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주장했던 '통상국가' 노선, 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통국가' 노선, 마지막으로 미일동맹을 폐기하고 평화헌법 역시 개정해야 한다는 '권력국가' 노선이 바로 그것이다.⁵⁷⁾

사실 전후 일본에서 혁신세력이 주장한 '평화국가' 노선은 실현되지 못했고,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성장에 전념한다는 '요시다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통상국가' 노선이 유지되어 왔다. 최근에는 자민당 내 보수우파로 대표되는 아베 총리가 주창하는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이 핵무기 보유까지도 주장하는 '권력국가'로 나아가 갈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남는다.

현재 아베 정부는 착실히 '보통국가'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정책은 두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미일동맹의 유지 및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과 관련해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미·일 3각 안보체제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아베 정부는 안보협력 증시의 대한민국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보호

57) 이명찬, “헌법9조의 개정과 ‘보통국가’, ‘권력국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화연구』 제16권 2호 (2008), pp. 67~104.

하기 위해 미일동맹 강화 및 우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자체적인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일 간에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군사협력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역시 아베 정부가 안보협력 증시의 대한국 정책을 전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일 간 안보군사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베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북일 국교정상화’ 실현이다. 특히 아베 정부는 전후체제의 탈피를 내세우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수교를 맺지 못한 채 전후 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실현은 바로 진정한 ‘전후체제의 완성(혹은 탈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은 북한을 현실적인 안보위협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는 일본 국민에게 북한에 의한 안보적 위협 문제를 각인시키면서 아베와 같은 보수우파가 일본 국민에게 지지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 현안으로 들어가면 현재 일본은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 사실을 인정하면서 북일관계의 해결을 모색했지만, 오히려 일본 국민의 북한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여론의 역풍을 겪게 되었고 지금까지 북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일 큰 원인으로 남아 있다. 고이즈미 정부 시절

관방부장관을 지내면서 아베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성립 시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대북정책은 일본의 독자적 외교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북경제제재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 한국과의 대북공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독자적인 북한과의 대화재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아베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 한국과 공조 자세를 취하면서도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적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외교를 병행하는 형태의 한반도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

나. 일본의 한반도 통일 인식

일본의 한반도 통일 인식은 자국의 국익 차원의 양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2월,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2+2 회담) 공동발표문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즉, 일본 정부는 미일의 공통 전략목표 중 하나로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⁵⁸⁾ 이것은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다.

⁵⁸⁾ 일본 외무성,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 회의(2005.2.19.),”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2+2_05_02.html>. (검색일: 2015.8.22.).

I
II
III
IV
V
VI
VII

게다가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한반도 통일 지지는 통일한국의 핵 비 보유 실현, 통일한국의 우호적인 대일정책 유지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통일한국이 일본, 미국과 전통적 동맹 및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비핵화 정책 등 기존의 안보정책을 유지하는 형태의 통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일본의 국내외 정세 변화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라는 경기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본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침체와 일본 내 보수우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2010년부터 센카쿠 열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일 간 분쟁 속에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인 급속한 성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파워 밸런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일본은 그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국력 우위를 전제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접근해왔다. 일본의 자신감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를 수용하는 접근법에 따라 자국의 역할을 모색했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상대적 국력 저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대일본 통일외교의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4.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가. 대자민당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1) 자민당 '세이와카이(清和會)'

전후 일본은 요시다 총리의 '경무장·대미협조' 노선을 유지해왔다. 한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는 요시다 노선에 비판적이었고, 일본의 자주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요시다와 대조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편 기시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완수하면서 '친미'적인 측면을 평가받지만, '대미자주'의 자세가 미국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요시다 외교와 구분되는 기시 외교의 또 다른 특징은 '아시아주의' 외교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특히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아시아 지도자, 예를 들면 타이완의 장제스(蔣介石), 필리핀의 막사이사이(Magsaysay), 한국의 박정희 등과 자민당의 여타 정치지도자보다 관계가 두터웠다.

이후 안보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국내정치 혼란의 책임을 지고 기시가 물러난 후 기시파는 분열되었지만, 대부분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가 주도하는 세이와카이(清和會)에 합류하게 된다. 당시 후쿠다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다나카는 중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중일관계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고, 후쿠다파에는 대만을 희생시키는 중일관계의 진전에 반대하는 친대만파와 박정희와 같은 반공주의 지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치

I

II

III

IV

V

VI

VII

가가 많았기 때문에 ‘친한파’의 아성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후쿠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우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리버럴한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러한 후쿠다의 리버럴한 정치적 성향이 가장 크게 발휘된 것은 1970년대 말 후쿠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전방위 외교’를 내걸고 전전(戰前)의 동남아시아 침략에 대한 반성에 기반을 둔 ‘후쿠다 독트린’ 발표였다.

세이와카이는 2000년대 들어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등 4명의 총리를 배출하였다. 이들의 외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베 총리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이데올로기적 외교를 지향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대북 외교에 대한 고이즈미의 대처는 다른 정권이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이와카이라는 보수 성향이 강한 파벌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이즈미는 비교적 리버럴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2) 대자민당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현재의 세이와카이,⁵⁹⁾ 특히 그 주류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 및 그 주변 인물들이 이러한 계보를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계승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 배경에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가 변화했다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용에 직면하여,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과거부터 공유했던 아

59) 현재 세이와카이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를 파벌 영수로 하는 ‘호소다파’로도 불리며, 자민당내 최대 파벌로 많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아주의적 요소가 약해졌다. 이들은 원래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친 대만파였기 때문에 대중 관계에서는 여전히 강경파이지만, 대한민국 관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전후 한일관계의 유대를 제공해온 냉전체제 속에서의 ‘반공’체제 강화 및 협력의 필요성이 냉전의 종식 및 남북체제 경쟁에서 한국 우위 확립으로 사명이 끝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유대’를 한일 모두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이와카이가지고 있는 아시아주의적 지향이 추구하는 연계 대상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향에 내포된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급성장한 중국이나 한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나타나면서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국가 간 대립, 심지어는 국내 대립으로 정치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추된’ 아시아주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쌍무적 의미에서 미일동맹 강화라는 기시 노선의 한 측면만이 강조되었고, 아시아주의적 측면이 실질적으로 포기되고 말았다.

또한,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그가 평소에 주창해 왔던 ‘전후체제의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모든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임을 생각해 봤을 때, 반공 기반의 ‘세이와카이’ 소속의 아베 총리 및 그 주변 인사들에 의한 대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 후쿠다 다케오의 라이벌이었던 구다나카파 즉, 가네마루 신(金丸信),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와 같은 정치인들은 북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들은 90년대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북한에 의한 위협 및 범죄행위를 축소화하면서까

I
II
III
IV
V
VI
VII

지 북한과의 국교회복을 서둘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거액의 원조 개시를 통해 냉전의 최종적 종결 실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것이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북한에 대한 보상의 길이라고 주장했다.⁶⁰⁾ 이들은 납치 문제보다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이라는 대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여론은 북한에 의한 불법적 납치의 실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교 회복이나 경제원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민당 내 현황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대자민당 통일 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조사 및 나아가서는 공동선언이 필요하다.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진력하고 있는 세이와카이와 납북자 문제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인권 문제라고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상호 간 조사 및 보고를 위한 교류가 필요하다.⁶¹⁾

둘째, 자민당 내 리버럴 경향의 파벌과의 교류 확대이다. 한국과 역사 문제 등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북한문제에서도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 리버럴 혹은 구다나카파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영수로 있는 기시다파,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이 영수로 있는 다니가키파,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영수로 있는 누카가파와 같

60) 90년대 이후 북일 교섭 과정은 신정화 연구(제Ⅴ장)를 참조. 신정화, 『일본의 대북 정책: 1945-1992년』 (서울: 오름, 2004).

61)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 동경대 명예교수도 납치 문제의 조사 보고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68.

은 구다나카 세력과 오시마 다다노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이 영수로 있는 오시마파와 같은 리버럴 세력과 연대가 가능하다.

나. 현안별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1) 일본인 납북자 문제

일본은 2006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었다.⁶²⁾ 그러다가 아베 총리는 2014년 5월말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회담 직후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관해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조사 개시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4일, 북한 정부가 1970년대와 80년대에 발생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했다. 이것은 북한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하는 본격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등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성 조치였다.

아베 정부는 북일관계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일부 해제조치는 북일관계에 커다란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첫째, 아베 자신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새로운 정치인으로 성장한 아베는 북한 대포동 미사일

62)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와 압박’이었지만,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압박과 제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배정호,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외,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p. 82.

I
II
III
IV
V
VI
VII

및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 왔다. 아베로서는 최근 일본의 보수우경화 경향 속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국내 정치에 전달함으로써 보수층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인 납북자 피해 가족의 고령화이다. 1970~1980년대 발생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피해 납북자의 가족들이 80대를 맞이하는 등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관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베 역시 취임 초부터 납북자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존의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다.

셋째, 전후 보상으로 대표되는 전후체제의 완성이다. 아베는 취임 초부터 ‘전후체제의 탈피’로 대표되는 보통국가 일본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북한과 유일하게 국교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보상 문제도 해결 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가 바라는 보통국가 일본을 위해서는 대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 시발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베 정부는 아베 개인의 소신 및 일본 국내 여론에 따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와 같은 과거의 강경조치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성의 표시에 일본 단독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라는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는 먼저 납북자 문제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가 비열하고 비인도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용서할 수는 없지만, 기존 아베 정부의 도덕주의적(moralistic)인 강경 일변도 일색의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현실주의적(realistic)인 측면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한일 간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2) 북핵문제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나아가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임에 틀림없다.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에 의한 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북한 핵개발은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현시점에서 최선이며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은 핵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북한의 안보 전제가 되는 국제사회와의 양호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핵포기는 북한 자신의 이익이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연대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도 협력해서 북한 핵포기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갈 생각이다.”⁶³⁾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먼저 북한의 핵보유

⁶³⁾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comment/faq/area/asia.html#05>>. (검색일: 2015.10.19.).

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며, 일본은 6자회담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먼저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어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 다자간 협의만을 내세워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대다수 국민은 남북의 대화에 일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한반도 안정 유지, 평화적 통일에 협력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남북 당사자는 남북대화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즉,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서 남북협력이 ‘윈윈(win-win)’ 관계임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어야 한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북일대화도 진전시킬 수 있다. 일본은 북일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 일본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북동아시아 국제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6자회담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남북한과 관계가 깊은 ‘몽골’을 다자간 협의 시스템에 초청해서 7자회담을 시도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북일대화에서 몽골을 매개로 한 비밀접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일본 내 여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각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크게 두 가지 주요한 무대가 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6자회담의 장이다. 북핵문제로 동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할 수 없다면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 및 미중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할 것도 없다. 단, 이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미중 양국에 대한 대응은 한국가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편이 확실히 효과적이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핵화 선언을 하는 등 ‘한일 이니셔티브’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유엔(UN)이나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대한 호소도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비핵화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면 국제적인 규범 강화 및 북한을 포함한 핵의혹국에 대한 압력 행사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일본 내에 존재한다. 즉,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반도가 통일을 맞이하는 경우,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 핵·미사일이 관리되고 있는지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주변국의 행동과 일본의 대응을 알아보는 것이다.⁶⁴⁾

먼저 핵과 관련된 위기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본은 주체적 관여를 할 수 없고, 북핵은 미일관계를 약화시켜 오히려 중국, 러시아와 미국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대로 말하면, 한반도 통일 이전부터 일본이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일본은 자국 안보의

64) PHP総合研究所, 『朝鮮半島統一にまつわる極東のパワーシフト: シミュレーションの報告と提言』(東京: PHP総合研究所, 2001).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반도의 군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한국 초기에 국제감시군과 국제평화유지군 같은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 참가하느냐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 PKO) 관련 문제, 또한 주한미군철수 때 필연적으로 문제 제기될 주일미군의 의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관여 자세 및 이와 관련된 법 정비 등과 같은 중요 과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미일 양측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안정세력으로서 상호이해와 장래에 대한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위협으로 촉발되는 일본 정치가들의 사소한 발언들이 ‘일본 군사대국론’이나 ‘일본 핵무장론’으로 비약된다. 이것은 일본의 실태를 왜곡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다.⁶⁵⁾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꿈꾼다거나 군사대국화 속에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갖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6자회담 재개 문제

앞서 얘기한 대로 6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동아시아 안보를 둘러싼 다자간 협력 가능성은 없어지고 만다. 일본에서는 6자회담에서 북

65) “時流自論,” 『朝日新聞』, 2003.5.4.

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6자회담에서 또 다른 대체 방안이 논의되었던 것도 아니다. 그룹에도 여전히 6자회담이 일본 정부에게 중요한 틀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6자회담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열리지 않고 있지만, 참가국들은 6자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자적 지역안보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북한 핵 문제를 양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안보적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주변국이다. 일본 정부는 지리적, 정치적으로도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참여하는 협상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6자회담 참가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일본이 참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대북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 또한 일본과 북한은 현재까지도 국교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정식 대화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아베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교섭에 나섰다. 이로 인해 아베 정부가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것은 과거 진행된 6자회담에서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겠다고 의제와 동떨어진 입장을 나타내면서 핵문제 논의 자체를 거부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북일 양자 간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도 느낀다.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일본은 북일 교섭에 대

I
II
III
IV
V
VI
VII

한 미국의 불만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2일 일본을 방문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공조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 일본은 6자회담 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계속해서 6자회담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치·군사적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특히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외교적 목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아베 정부는 (1)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2)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의 부상 견제라는 명목하에 동남아시아, 한국, 호주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같은 일본의 국제적 진출 역량 강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6자회담과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분리 진행이다. 아베 정부는 2014년 5월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간 교섭 실시에 합의했고, 만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북일 간 국교정상화 교섭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물론 북일 간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주요 논의는 전후 북일 간 배상 문제, 북한 핵문제, 과거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현재 북일관계를 보았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 납북

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당분간 북일 간에는 양자 교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과거의 6자회담에서와 같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우선시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강력히 부인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일본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서 항상 벗어나 있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당분간 최우선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위한 북일 간 양자 교섭에 집중하면서도, 일본 안보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 핵문제라는 의제에 집중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셋째, 일본은 6자회담이 재개될 때에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든든한 협력자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자회담에서 가장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의장국인 중국일 것이며, 이것은 소위 G2 체제로 불리는 지금의 미중관계의 세력 현상과 비슷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비슷한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국을 찾을 것이며, 이에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 역시 북핵문제와의 관련 속에 6자회담 내 한일협력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 내 한일협력의 움직임은 과거에 열린 6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 예를 들면,

I
II
III
IV
V
VI
VII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회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6자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이 주도하는 안건에 대해 여러 차례 공동의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6자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미중이라는 강대국 게임에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한국과 같은 미들파워와의 협력하에 강대국 정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조해야 한다.

(4) 한반도 통일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한국과 미국 내에서는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통일과정에 따르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분석, 통일 이후의 이익 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경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경제부진이 계속되고 대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군부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 체제를 뒤엎는 경우, 난민이 어떠한 원인에 따라 발생되고 국제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한 경우 등이 주로 상정되고 있다. 즉, 북한의 실질적 붕괴를 전제로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의 전반적인 논의이다.

이것은 북한체제 및 그 행태 자체를 하나의 비정상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 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일본은 북한 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문제가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방법은

남북한의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 남북공존의 구조 형성과 북한 민생의 안정 및 향상이 요구된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과 민생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곧 평화적 통일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 노선의 온건화가 한반도 통일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북한 최고 지도자(김정일)와 합의에 이른 적이 있다. 바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결과 도출된 ‘북일평양선언’이다. 이 선언은 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과 함께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 자신이 서명한 ‘북일평양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남북한 관계가 안정되고 북한이 결심만 하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 속에 ‘북일평양선언’ 실행을 위한 교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사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상정한 통일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및 정치인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의 국가노선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이 ‘보통국가’를 넘어 ‘권력국가(군국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핵무기 보유국 통일한국과 핵무기 미보유국 일본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해서 반대해 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더욱 깊어진 일본 국민의 반핵 움직임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I
II
III
IV
V
VI
VII

또한, 현 시점에서 ‘핵무기 보유국 통일한국’이라는 논의는 한국에서 금기 사항이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현재의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여분의 방위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한반도 통일 전에 ‘한반도 통일의 순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한다’라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한국의 실현 전에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관리체제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결국 ‘한반도 안정화’를 통해 ‘동아시아 안정화’를 추구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통일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둘째, 통일 한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야당 및 시민사회 세력이 전혀 힘을 내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주변국 간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반일 내셔널리즘의 증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매개로 접근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친중반일(親中反日) 경향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와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통일 이후에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반일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둔 ‘친중반일’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일 내셔널리즘이 사용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애

기하는 ‘전쟁의 관심전환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내부 분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박정희 정부와 같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한국이 민주화 요구에 따른 국내 분열을 통제하기 위해 반일 정서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서 통일한국이 ‘반일 내셔널리즘’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금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로서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경제체제의 가치와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안보적 이점을 비롯해 일본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 대 중국’이라는 견제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통일한국이 친중국으로 기울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일본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⁶⁶⁾

결국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질 것인지, 또는 통일한국이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동아시아 안보상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 변화에 따른 미일동맹의 강화 및 일본의 자주적 방위력 강화 움직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일본은 다양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차원과 한반도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66) 한동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변영』 (서울: 형설출판사, 2015), p. 168.

I
II
III
IV
V
VI
VII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 역시 동아시아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 미일동맹 강화라는 변화의 움직임 속에 일본과 어떠한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일본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상정하는 일본의 양면적 모습을 파악하고, 양면적 차원에서 일본의 대한 반도 정책 및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5. 소결: 대일본 통일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첫째,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의 실행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임당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일 대립을 견제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화가 필수조건이다. 또한,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재개와 같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정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가능하면 한국의 미들파워 외교의 협력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일본에게도 이러한 인식을 설득시켜야 한다.

둘째, 일본 정부와 민간 대상 통일외교의 조화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명확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및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본의 보수우경화 및 보통국가화에 대응하는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최근 일본 내 한반도 통일 및 북한 관련 전문가의 급감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의 관련 전문가가 일본 연구기관 전문가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설득 및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 통일외교 논리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차원에

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한일 우호관계 증진,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및 이질감 해소, 이를 위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의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대일본 통일외교의 선택과 집중이다. 대일본 통일외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다. (1)한국과 관련해서 일본의 명확한 한반도 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2)북한과 관련해서 일본의 외교안보 및 주권 수호를 고려한 통일외교 즉, 북핵문제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같은 문제와 관련된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3)한반도와 관련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인식 제고 및 우호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의 대일본 통일외교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국이 대일본 통일외교를 전개함에 있어 각 차원에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일본 통일외교의 선택과 집중 역시 필요하다.

넷째, 한일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이다. 특히 북일관계, 과거사, 그리고 영토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북 접근에 대한 소극적 동의 혹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탈냉전 이후에도 북일 접근에 대한 알레르기를 지녔던 탓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한·미·일 공조 속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독자적 외교를 추진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과거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기간에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의 봉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대일본 통일외교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한일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VII



V. 대(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우 평 균
한국학중앙연구원

1. 들어가며

한반도 통일은 한국인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토대로써, 1948년 분단 이후 끊임없이 모색되어 온 지상과제이다.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남과 북 모두 추구해 온 장기 정책 속에서 설정되어 왔으며, 2013년 2월 출범한 한국의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통일의 의의를 강조하고 통일기반 확보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지향해왔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 내에서의 통일 준비 움직임과 더불어 통일의 주체인 북한의 동향과 함께 조화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도의 게임이다. 한국 정부 역시 통일외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일 설득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통일 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이후 크림(Crimea)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탈냉전 시대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지각변동의 원천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I

II

III

IV

V

VI

VII

이와 같은 근거는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과 직접 관련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1945년 해방 당시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여 북한에 소비에트형의 공산국가를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북한의 초기 역사에서 국가 틀을 확립하고, 냉전시대 북한의 대외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가이다. 둘째,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과제 및 동해로의 출구 확보가 지정학적 이익 및 안보 측면에서 북한영토로의 접근을 필수불가결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현시점에서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이다. 특히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구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등 외교적으로 고립 가능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북한 역시 핵개발과 인권 문제 등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양국은 외교적 유대와 더불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밀착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북한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러시아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유사시 위기가 조성될 때, 푸틴 대통령 같은 리더십하에서 러시아군을 한반도에 파견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게끔 만들었다.

본 장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념과 이를 토대로 한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1절에서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을 살

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을 러시아의 한반도 경험과제, 탈북자 문제 등의 현안 및 외교안보 논리 등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제기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앞선 내용에 입각하여 결론을 맺을 것이다.

2. 러시아의 한반도관 및 통일관

가. 러시아 내 의견 그룹의 분화

한국에게 필요한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한반도관 및 통일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러시아의 관점이라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체로 ‘러시아’의 입장을 하나로, 즉 정부의 공식 견해를 전제로 하고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에 러시아에는 정부 외에도 정치인, 전문가 집단 및 시민사회 그룹 등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부류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에는 각각의 한반도관 및 대북관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입장차가 드러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어떤 특정 성향의 집단 의사와 유사한 경향을 띠 수 있는데, 역으로 이를 유추하면 특정 집단 혹은 전문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한 입장 차이를 성향에 따라 분류하면 ‘친북’, ‘중도’ 및 ‘친한’이라는 범주에서 구분이 가능하다.⁶⁷⁾ 그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 우평균, “2011년 정상회담 이후 러·북관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분석,” 『국제문제연구』, 제15권 2호 (2015), pp. 42~73; Alexander Lukin, “Russian Strategic Thinking Regarding North Korea,” (The Asan Special Forum, October 7, 2013),

I
II
III
IV
V
VI
VII

(1) 친북 입장

러시아는 소련을 계승한 국가로서 과거 냉전기 서방 진영과 적대하면서 북한을 사회주의 동맹 세력으로 감싸왔던 전력을 갖고 있다. 소련 붕괴는 이 같은 전통을 허물었고, 특히 1990년대 집권했던 옐친(B. Yeltsin) 대통령을 위시하여 독립 러시아를 초창기에 이끌었던 집권 세력은 북한을 경원시하면서 한국과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다. 그러나 옐친 정부가 1990년대 중반까지 주도했던 한반도 정책은 소련 및 현 러시아의 전반적인 외교노선에서 볼 때,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시기에 해당된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러시아는 다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남북한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노선상의 선회를 단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정부기관 및 기구, 한반도 전문가 집단은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문 기관 및 전문가들의 견해가 정부에 전달되고 교감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구소련 시기에 북한과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소련 해체 후 20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우방국 북한과 맺었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같은 과거 경험을 가장 존중하는 집단은 러시아연방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공산당원은 아니지만 북한과 교유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을 계승한 당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http://www.theasanforum.org/russian-strategic-thinking-north-korea>>. (검색일: 2015.8.13.).

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연대하여 서방세계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⁶⁸⁾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소연방 붕괴 및 러시아 독립 이후 만년 야당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한 때 제2당의 위치에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향후 집권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의회 내에서 푸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지속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등 집권 세력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북한의 현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면서 북한과의 연대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에 한반도 통일 등 미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연방공산당과 대외 노선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강대국민족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혹은 ‘초민족주의(ultra-nationalism)’를 신봉하는 집단 역시 러시아를 위협하는 서구의 반러시아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공고한 연합을 형성해야 하는데 북한도 이 연합에 있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연대 세력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⁹⁾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초민족주의 집단은 현 시점에서 서구와의 투쟁을 위해 연대세력으로서 북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미래 한반도의 구체적인 모색, 특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북미 직접

68) “КНДР: страна больш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К.К. Тай саев о своей поздке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http://kprf.ru/international/new-world/121626.html>>. (검색일: 2015.8.10.).

69) Леонид Ивашо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е сломить,” 2013.5.8., <<http://www.pravda.ru/video/pravdablog/11695.html>>. (검색일: 2015.8.10.).

I
II
III
IV
V
VI
VII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기초할 때, 러시아내 공산주의자들과 초민족주의자 및 이들의 견해에 수긍하는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통한 ‘1국 2체제 2정부’ 시스템 수립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2) 중도적 입장: 북한에 가까운 중도

러시아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인사들 중의 다수가 사실상 중도적 입장에서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도적이라 함은 좌파 쪽에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초민족주의 집단이 있다면, 우측에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우파 인사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이 같은 분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중도적 입장 역시 친북에 가까운 현실이다. 중도 인사들 역시 과거 및 현재 북한과 교류 경험이 많으며, 대체로 ‘북러교류협회’의 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⁷⁰⁾

좌우의 중간에서 입장을 개진하는 다수의 관련 인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러시아 정부가 채택해 온 대한반도 정책의 맥락과 일치한다. 이들의 강조점은 북한체제 자체가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정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서, 특히 한국과 미국 등 서구진영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체제를 압박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현 상황을 인정하고 북한 지도부가

70) 러시아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대중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이들은 내용상 친북·반한적인 주장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공공외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가설 수 있도록 외부 세력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⁷¹⁾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는 집단 및 인사들은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즉,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우선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위협하거나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통해서 북한의 개발(development)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발의 자연스러운 전개 속에서 통일과정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미래를 설파하고 있다. 북한의 연착륙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의 자생론과 외부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⁷²⁾

이와 같은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는 그룹 및 전문가들은 한반도 가스관 사업, 철도연결, 전력망 사업 등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한 거대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과거의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

71) Валерий Денисов, “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охраняются,” *Аналит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научно-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МГИМО(У) МИД России*, выпуск, vol. 8, no. 20 (September 2006), pp. 1~20; “Пхеньян стремится в “ядерный клуб,” *Голос России*, 2013.4.23., <<http://newsland.com/news/detail/id/1165987/>>. (검색일: 2014.11.10.).

72) 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ускользаю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Фонд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November 9, 2014, <<http://www.fondsk.ru/news/2014/11/09/obedinenie-korei-uskolzajuschie-vozmozhnosti-30329.html>>. (검색일: 2015.8.11.).

조하고 있는 이 같은 입장은 러시아가 추진해온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이 답보 상태에 이른 책임 역시 주로 한국에 있다는 주장에 연결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도적 입장은 한반도 통일이 남과 북의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한반도 관련 이해당사국들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러시아도 상응하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개입원칙은 한반도 내 지정학적 변동 방지, 미국과 중국의 배타적 이익 추구 방지,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관리, 북한 난민의 러시아 유입 방지 및 대책 수립과 같은 우선적인 관심사에 적용된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이 수반하는 통일비용을 포함한 격변의 양상을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비용으로 카자흐스탄의 3년 치 국민총생산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과거에 추정되었지만, 지금은 2~5조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만일 통일과정에서 내전을 겪게 된다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데 과거의 IMF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⁷³⁾ 이들의 논리는 대체로 한국 내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여 겪게 될 곤경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견해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73)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какие проблемы стоит ждать,” *Вой на и мир*, июнь-июль (2015), <<http://www.warandpeace.ru/ru/commentaries/view/79012/>>. (검색일: 2015.8.11.); Alexander Panov, “Russia’s position and role in Korean unification,” <http://japanstudies.ru/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71&Itemid=60>. (검색일: 2015.8.20.).

(3) 반복 및 친한 입장

러시아 내 주요 정치인 및 전문가 집단 내에서 반복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인사들은 수적으로 소수이지만, 과거에 비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북한체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세습 권력을 사라져야 할 정권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의 정통성을 존중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야기하는 위기상황을 북한이 대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에 국제사회가 보상을 통해 북한과 타협하려 한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부원장 같은 인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북한이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 과부담(overburdened) 상태에 이르렀으며, 과거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체제 붕괴 같은 상황이 북한에서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⁷⁴⁾ 그의 견해와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내분에 의한 미래 북한체제의 붕괴와 대략 2030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을 제시한 IMEMO 보고서(글로벌 전망 2030)가 2011년 말 러시아와 한국에서 간행된 바 있다.⁷⁵⁾ 앞서 제시한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는 러시아내 한반도 전문가들 중에 다수가 이 보고서에 대해 일부 견해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으나, IMEMO 보고서가 공개 출판될 정도로 러시아에서도 한국 주도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하는 하나의 흐름이 공식화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74) Vasily Mikheev, "Collapse of Socialism Comparison: Russia Experience and North Korea," (IMEMO, October 12, 2012).

75) А.А. Дынкин, Под ред,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глобальный прогноз 2030* (Москва: Магистр, 2011); 알렉산드르 딘킨,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김현택·이상준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pp. 394~398.

I
II
III
IV
V
VI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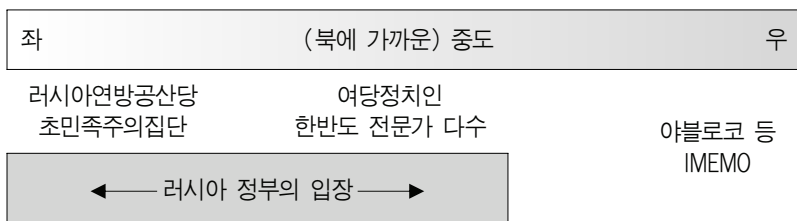
IMEMO는 알려져 있듯이, 러시아에서 가장 국제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연구소로서 소련말기 고르바초프가 주창했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1990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에도 앞장섰던 기관이다. IMEMO가 러시아에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IMEMO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비전 역시 소수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견한 선견지명이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북 및 친한적 입장을 견지하는 주된 논리는 북한의 실체가, 특히 경제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북한 주도로 한반도 통일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망상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이 이끌고 가는 통일이 바람직하며, 러시아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원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북한 정권에 반대하고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앞서 제시한 중도적 인사들 중에서도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 통일과정을 이끌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사실상 한국이 통일과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일부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으로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고수하지만, 사적으로는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모순된 태도가 근자에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순적 태도는 시민사회의 반응과도 연관된다. 즉, 시민사회에서의 대북 여론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며, 북한체제의 속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문제 및 통일과정에서의 한국의 주도성 및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다. 특히 소련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서 북한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시민사회에서의 부정적인 대북인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명분에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을 평가해 온 중도적 입장의 다수 인사들도 자신들의 입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양면적인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견해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⁶⁾ 그러나 이 같은 경향은 아직은 일각에서 나타나는 흐름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며, 북한과 교류 경험이 많은 친북적 입장에 가까운 중도적 인사들의 반한적 의견 표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림 V-1**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의견 그룹의 구도



출처: 저자 작성.

나. 푸틴 정부의 한반도 통일관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앞서 언급한 한반도 관련 러시아 내 의견 집단 중에서 친북 및 중도적 입장의 견해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기조로 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정책결정자 및 다수

76) “Россия может объединить Корею иным путем,” *Взгляд*, January 29, 2015, <<http://www.vz.ru/politics/2015/1/29/726743.html>>. (검색일: 2015.8.11.).

I
II
III
IV
V
VI
VII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는 한반도 정책의 가치는 한반도가 ‘현상유지(status quo)’를 하는 것이다. 폭력에 의한 정권의 변동은 러시아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⁷⁷⁾ 푸틴 정부가 전반적인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유지를 해왔지만, 때로는 북한문제에서 보다 강경한 조치로 선회하는 등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 제2차 및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유엔제재결의안에 동참했던 적이 있었다. 또한 안보리에서 결의된 대북제재안의 관철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해왔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 양대 핵보유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감도 갖고 있다. 북핵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러시아 내 의견 집단 중에서 좌와 중도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RIAC)를 선정하여 통일 관련 주요 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러시아 정부의 수장인 푸틴 대통령의 대한반도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학술기관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소를 제외하고 정부 부설 기관 중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표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를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유럽,

⁷⁷⁾ Kirill Barsky *et al.*, “Russia’s Foreign Policy in the Pacific Region,” *Security Index*, vol. 17, no. 2 (2011), pp. 52~54.

대양주, 북극,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의 전 세계의 주요 지역을 포괄하면서 경제, 환경, 교육, 과학, 에너지, 국제안보 등의 이슈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 이래 수편의 보고서를 작성해왔으며, 필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이다. 한반도 현안에 관한 이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핵무기에 대한 중앙통제를 상실할 위협에 처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북한영토에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 때 핵통제를 중심으로 최소 필요인원인 군대 규모는 약 30,000명에 달할 것이다. 이 때 미국과 중국 간의 사전 합의가 없이 미군이 전개된다면 미중 간의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한국전쟁 2.0). 그러나 새로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미국이 원치 않는 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쟁은 중국과의 치명적인 관계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는 바람직한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나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은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안정화된 미래를 구상하는데 역작용을 유도할 뿐이며, 북한 지도부가 악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reform) 조치를 취하는 방법만이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⁷⁸⁾

I
II
III
IV
V
VI
VII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 인접 국가로서 독립적이고(independent), 중립화된(neutral) 비핵(nuclear-free) 한반도를 원하지만, 현재 남북한을 비롯하여 어떤 한반도 주변국가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통일비용이 초래할 부작용 때문에 갑작스러운 조기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도 현재의 세력균형이 타파될 때의 혼란과 불이익 때문에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을 고립에서 이끌어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Korean question)’를 다루어야 한다. 현재 유엔에서 북한이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유엔이 유엔의 깃발 아래 북한과 맞서서 6·25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 상태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를 통해 6·25 전쟁이 과거의 유산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 군사령부(UN Command)를 해체하고, 한국에는 미국과 한국 양자 간의 군사구조만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한반도 관련 주요 이슈들을 유엔 한반도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주재 아래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남과 북이 불가침협정 형식보다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같은 합의문 발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미·일·중·러가 이를 보장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가장 의미를 지닌 평화 보장이 될 것이라고 부언하고 있다.⁷⁹⁾

79) В. Ларин, “Угроза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а, 2013), pp. 72~73.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으로 교차협정(cross-agreements) 체결을 주장하면서, 기존 6자회담의 구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북미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의 한미, 미일, 북러, 한러, 북중 등의 협정체제와 병합하여 완전한 구도를 확립하게 된다는 것으로써, 북미 간 협정 체결시의 권리와 의무는 중러에 의한 모니터링에 종속될 수 있으며, 같은 논리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에 의한 감시하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상호 결속 및 견제의 체계를 동북아에서 만들어 다차원적인(multi-phase) 구도가 작동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⁸⁰⁾

이와 같은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내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역설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에 있어 한국과 기존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북한이 고립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즉, 2013년 말의 시점부터 작성된 국제문제위원회의 보고서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으로서 실제 2013년 이후 전개된 북러관계의 양상으로 미루어볼 때, 이 같은 제언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를 원하지 않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79) Глеб Иващенко, “Незаживающая рана Кореи,” June 25, 2015, <http://russiancouncil.ru/inner/?id_4=6212#top-content>. (검색일: 2015.8.5.).

80)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имирения,” June 16, 2013, <http://russiancouncil.ru/inner/?PROJECT_THEME_ID_4=9&TYPE_4=analytic&PROJECT_THEME_ID_4=35#top-content>. (검색일: 2015.8.5.).

러시아를 비롯해 대부분이므로 북한의 급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체적인 문제로 급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리더십 발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 전개 상황을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상황 전개를 원치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러시아에서 이념적으로 상이한 세력에 의한 집권층 교체가 도래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한반도 정책의 토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통일과정 및 통일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전반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한다. 북한급변을 비롯하여 통일과정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⁸¹⁾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중국의 북한 포기가 단순히 상황적인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역사적으로 불가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지만⁸²⁾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동 위원회에서는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역으로 보면 이 논리는 북한 및 한반도 미래 상황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러시

81) 집필자들 중의 한 명인 보론초프(A. Vorontsov)의 견해로서, 과거에도 유사한 견해가 있었지만 이전에 비해 상세하게 중국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 역력하다. A. Воронцов, "Позиция Китая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pp. 60~68.

82) 중국이 현 상태의 북한과 경제교류를 해줘야 중국에게는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 인접 지역에서의 안전을 확고히 하려는 장기적인 중국의 이익과 모순된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브랜던 브라이스,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риск и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итая," *Рускор*, March 31, 2013, <<http://www.ruskorinfo.ru/articles/politics/8263/>>. (검색일: 2015.8.12.).

아가 중국과 공조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변 및 통일과정에서 같은 노선을 취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는 향후 주목할 만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2)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관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상징적인 언급 이외에 상세한 표현을 한 적은 없었다. 이로 미루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러시아의 입장은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구체적 방도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큰 틀에서 개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대통령은 대한반도 정책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에 있어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비롯한 국가 간 외교 및 긴급상황 시 국정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경우, 2012년 당선으로 보장받은 6년의 임기가 2018년에 끝나더라도 한 차례 더 출마하여 2024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 정치 및 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의 존재는 비중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한반도 통일 관련 발언은 2013년 11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내 방송과 행한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푸틴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표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갖고 있는 두 가지 전제로서, 절대적으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 통일에는 남북 상호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⁸³⁾

I
II
III
IV
V
VI
VII

푸틴 대통령이 밝힌 이와 같은 입장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힌 기존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이 남과 북의 필요(다른 말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즉, 남북 간 협상을 통하지 않고 한 쪽의 봉괴를 통해 일방적으로 한 쪽이 흡수하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 국가가 간섭하여 북한을 봉괴시키고 통일을 추구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처럼,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고, 한국이 구상하는 계획대로만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일과정이 실제로는 한국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띠게 되면, 러시아가 비전을 제시해 온 러시아 극동 개발 및 태평양으로의 진출 계획이 진전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을 우려를 러시아는 갖고 있다. 러시아의 미래 비전이 현실화되려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한국이 이에 동조하여 메가 프로젝트를 추구할 때 이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러시아는 통일과정에서 만일 북한이라는 존재감이 사라지면 러시아가 한국과 직접 대면하게 되고, 통일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국이 러시아의 입장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두 번째 제시한 입장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는 등 모든 가능한 제약이 사라지면 러시아가 전체 한반도(whole of Korea)에 쉽게 다가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

83) “Путин: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мирным путем,” *RIA Новости*, November 12, 2013, <<http://ria.ru/world/20131112/976354311.html>>. (검색일: 2015.8.5.).

기서 정치적 문제를 비롯한 제약이라는 것은 통일과정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남북관계의 담보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제약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당장이라도 철도 연결 사업을 비롯한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 같은 사업 조성을 통해 북한을 국제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끌어들이며 북한개발을 국제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이 바로 이와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일단 유도하여 북한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북한 정권 및 체제가 정상화되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규탄해온 북핵, 인권 등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행에 관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이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회생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

상기한 푸틴 대통령의 견해는 곧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 및 기관들의 견해와 일치하며,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적어도 푸틴 대통령 집권 동안에는 러시아 내 부적으로 혼선 없이 대한반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한반도 노선이 적어도 향후 10여 년 뒤인 2020년대 중반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북한 및 한반도에 대한 관점과 한반도 통일관을 토대로 통일과 관련된 러시아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이 어떤 전략과 논리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II
III
IV
V
VI
VII

3.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협과제

(1) 신동방정책의 추진과 동북아 진출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재집권 이후 이른바 ‘신동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신동방정책은 푸틴 대통령이 과거 집권 초기부터 강조했던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과 동시베리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집권 3기에 이르러 보다 가시적인 정책을 통해 수립된 목표 달성에 다가서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취임 이후 극동지역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전담하는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신설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푸틴의 극동 개발에 대한 이 같은 의지를 바탕으로 러시아 당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자원 조달과 더불어 각종 제도 개편을 통해 러시아 내외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기조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뒤이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러시아의 대서방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 인도 등 동방 진영과 더욱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더욱 증대했다. 러시아의 극동·동시베리아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시아의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한반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는 동방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구도는 근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하반기부터 미래 한국의 대륙 진출 비전으로서 대통령에 의해 주창되기 시작한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협력국가가 러시아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지경학적 견지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대외 비전이 상기한 상황 및 근거에 의해 공간적으로 중첩되고, 양국의 미래 구도를 상호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양국 정상이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표명해 왔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처럼 양국이 표명하고 있는 큰 원칙상에서의 이해와 합의는 한반도 통일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이 한반도 통일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과업이라는 점을 존중하는 자세는 러시아와 한국이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문제로 난점이 발생할 때, 큰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기초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향후에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2) 남·북·러 협력 구상과 북한개발 과제

동북아의 일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 한국이 추구하는 미래 전략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가 지엽적인 문제점들을 상쇄하는 대원칙이 될 수 있다고 앞서 언급한 점은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한 거대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철도연결을 예를 들자면, 2001년 8월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과의 모스크바 선언에서 남

I

II

III

IV

V

VI

VII

북한과 러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루트를 창설하는데 합의한 이래, 2013년에 나진-하산 구간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바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 **그림 V-2** 러시아의 대륙횡단철도의 기본망 및 송전망 연결 사업계획



출처: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포브스』, 201507호, 2015.6.23.,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07046>>. (검색일: 2015.8.6).

남·북·러를 잇는 철도 연결이 사업의 최종목표이지만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우선적으로 나진-하산 철도를 건설하고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오는 남·북·러 3각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2013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본 계약 협상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를 고려했지만, 투자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리스크 부담으로 한국 측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러시아 철도공사가 앞장서서 사업을 담당해 온 러시아에서는 총괄적인 철도연결사업의 담보상태에 대해 그 원인으로 한국의 미흡한 투자결정 노력에 더해 의지 결여를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3년 11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고려할 협력 사업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정부가 결정해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면 강제할 방도가 없으므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북핵이나 북한에 대한 투자 유인 요소의 결여 같은 현재의 한반도를 억누르고 있는 환경이 바뀔 만한 시점이 도래하면 언제라도 대북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임을 들어 상호 신뢰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도 표명하고 있듯이, 러시아의 대북 협력 사업 1순위의 희망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나. 탈북자 및 국경관리 문제 등의 현안

(1) 탈북자의 러시아 유입 문제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관련 인사들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중 하나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탈북자의 대량 유입 문제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무력 충돌 등을 수반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시작될 경우, 러시아와의 국경지대 부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대거 불법으로 러시아로 탈출하거나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때 러시아 정부가 합법적 수단으로 평소처럼 국경을 통제하겠지만,

I

II

III

IV

V

VI

VII

한 번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러시아 국경에 몰려 물리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러시아로 밀려드는 상황을 최악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이 같은 러시아 인사들의 우려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공식적인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었지만, 합당한 대응 논리 및 설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대응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무단 국경 이탈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처한다는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이 원칙집행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표명하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즉, 북한 주민 대량 이주로 인해 러시아가 물질적인 손해 및 지정학적·지경학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국이 앞장서서 배려할 것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선의 대안으로 당사국간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러시아에 비해 난민 유입에 따른 공포 혹은 거부감이 덜한 중국의 만주 혹은 중국 내 러시아 접경에 인접한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도가 모색될 수 있다. 유사시 한반도 최북단에서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보다는 중국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이 방도를 구상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체가 공개화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이고,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주민의 러시아로의 대량 유입 문제는 앞서 첫 번째 제시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함께하는 논

의의 장에서 공동의 방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원칙천명이 중요하다. 국제법에 의거하거나, 난민으로 처리하는 문제 등 기존 국제 규범 내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ad hoc)’ 긴급 사안으로 분류해 국제 합의에 의해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역시 중대한 요소이다. 한반도 문제는 1945년 해방 이후 유엔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오래된 과제이고, 통일한반도를 위한 한국인의 노력만큼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작용하여 사태를 완결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에서의 논의를 통한 미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최근에 강조하는 논리이므로 충분히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국경관리 문제

앞서 언급한 탈북자의 러시아 유입 문제는 자동적으로 국경관리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많은 러시아 내 전문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 및 동시베리아 일대가 원래 인구밀도가 희소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러시아인 외에 중국인 등 외부인들이 대량 이주하게 되면 그들의 의해 지경화적인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주민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인에 비해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로서는 계획되지 않은 이방인의 대량 유입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다. 국경보호는 이를 위해 필수적인 관심사항이며, 항상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경관리 문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러시아를 위해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 앞서 제시한 북한주민의 러시아 유입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다. 또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I
II
III
IV
V
VI
VII

서는 북한 유사시 혹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북한 측 국경을 유지하고 정상화하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외교안보 논리

(1)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북한이 일관되게 구사한 전략이자 전술이었다. 러시아 역시 소련 당시에는 북한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으나, 냉전 종식 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다소 복합적인 대응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북한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1년 8월 북러 정상회담 시 채택된 ‘모스크바 선언’ 제8항에 북한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고, “러시아 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던 사례이다. 이 표현은 북한의 미군철수에 대한 입장에 대해 그 입장을 이해한다는 완곡한 표현이며,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미군철수를 주장하거나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냉전 종식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 이전, 즉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및 한국의 현상타파 노력에 대한 억제를 일차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동북아안보 차원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질서의 안정화

I
II
III
IV
V
VI
VII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하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⁸⁴⁾

둘째,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차원에서 미군의 존재를 묵인하는 반면에,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미군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⁸⁵⁾ 이 같은 입장은 통일이후에 미군이 배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도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미군의 존속과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의 역할 부재 혹은 러시아의 기존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든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셋째, 앞서 밝혔듯이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주한미군에 대한 의사 표명은 북한과의 관계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근본적인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북한과 관계가 가까울 때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북한과 공조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구사하는 전술적 차원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제를 적용하면, 2011년 김정일 사망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2015년 현재까지 북러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되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84) 허문영 외,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95~96.

85) 러시아 입장에서 통일한국에 미군이 존재하다는 것은 '동진(eastward expansion)하는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 판이거나 러시아의 현관에 군 기지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Vadim P. Tkachenko, "A Russian View on Korean Security after the North-South Summi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no. 2 (Winter 2000), p. 31.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대러시아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거취 문제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러시아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 이후 상당 정도 미래 관계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 힘의 관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⁸⁶⁾ 실제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파생되고 어떤 사안이 쟁점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 심지어 북한의 요구대로 미군철수를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러시아의 요구나 주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다만 통일한국 이후 미군철수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만큼⁸⁷⁾ 아직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앞선 논리의 대안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 내 미군이 존재할 경우, 그 성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한국의 이명박 대통

86) Seung-Ho Joo, "Russia's Policy on Nuclear Prolife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Focus*, vol. 24, no. 2 (August 2014), p. 183.

87)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담당 보좌관이었던 수미 테리(Sue Mi Terry) 콜롬비아대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원이 2014년 6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통일 후 미군철수를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한국과 미국 및 중국이 이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중국전문가 오빌 셸(Orville Schell)도 미중관계 조정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 후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및 핵무기 금지를 중국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견해는 한반도 미래와 관련하여 아직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공론화된 것은 아니며,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통일 후 미군철수’ 중국과 논의해야,” 『YTN』, 2014.6.7., <<http://www.youtube.com/watch?v=X9uBCEgaDSI>>. (검색일: 2015.8.6.); Orville Schell, "Can the U.S. and China Get Along?," *The New York Times*, July 10, 2015, <http://www.nytimes.com/2015/07/10/opinion/can-the-us-and-china-get-along.html?_r=0>. (검색일: 2015.8.20.).

I
II
III
IV
V
VI
VII

령 재임 중에 통일이 되어도 미군이 현재 북한 지역에 주둔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중국에 밝히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⁸⁸⁾ 통일 이후 한반도에 주둔 가능한 미군의 성격을 기존 한미동맹에 입각한 파견군대 주둔으로 계속 유지한다거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 확립이 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인 기간 주둔하는 군대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통일 후 미군의 성격에 대한 규명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설득 논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공동의 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논리로서 통일된 한반도가 설사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미군이 존속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러시아 및 중국 등 대륙 국가와 사이가 좋았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의 존재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에만 주목하여 용인하기에는 북한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⁸⁹⁾ 특히 통일한반도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전면적으로 제거할 것이기에 통일 이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안보상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이 통일 이후의 독일처럼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 및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88) “李대통령 “통일후 미군 北주둔 안할거란 것, 中과 얘기중,” 『동아일보』, 2013.2.15.
 89) 러시아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추수룡(楚樹龍) 칭화대 교수처럼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유익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北, 中에 이익보다 손해…통일 후 미군, 中 위협 안 돼,” 『연합뉴스』, 2014.9.11.

넷째, 세 번째 논리의 연장으로서 통일 후 동북아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러시아가 그동안 주장해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설립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의 대표 역시 동의한 이 같은 주장⁹⁰⁾은 한국인의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여망 뿐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비전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2)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처리 방안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하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북한을 제외한 모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한국이 동의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는 특히 미국의 우선 과제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러시아 역시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러시아 내에서 북한 유사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구실로 미국은 물론 중국의 자연스러운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러시아가 그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실질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일단 개입하게 되면, 대량살상무기 제거 이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배타적인 영향력을 유

⁹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표 취임 후 2015년 3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둔 라흐만 수석 논설위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중앙일보』, 2015.3.14.

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하여 제시 가능한 논리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지역 내 대량살상무기 제거는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짐을 밝혀야 한다. 설혹 미국이나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유엔이 보증하는 등 국제적인 승인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원칙의 준수는 러시아가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 해결 원칙을 천명해왔던 만큼,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방식을 동반할 것이다.

둘째, 북한 지역 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위시하여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담당할 실무진 간의 의견 교환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 교환 및 사후 대처 방안에 이르기까지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연관된 포괄적인 사안을 담당하는 협의 기구 창설도 가능하다. 물론 유엔의 주관하에 이 작업이 수행된다면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미국과 중국 위주로 사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러시아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내에서 핵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 방사능 낙진 등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유입을 유념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만일 북한의 핵시설단지인 영변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방사능이 전파될 것으로 보면서, 해당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는 20년간 생물이 자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⁹¹⁾

I
II
III
IV
V
VI
VII

4. 소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향에 관해 한중, 한미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소외받고 있다는 인상을 스스로 갖게 될 때,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과 더불어 양대 핵강국이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러시아 역시 유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대러시아 접근의 방도를 구체화하면서 러시아를 통일의 우군(友軍)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총괄적으로 개괄할 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응과 지금부터 구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러시아 통일외교 논리 및 전략을 위해 본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부문, 즉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협과제, 탈북자 및 국경관리 문제 등의 현안과 외교안보 논리 중에서 외교안보 논리 도출은 장기적 과제에 해당하며, 탈북자 및 국경관리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 가능한 사안인 반면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협과제는 장기 과제이면서 지속

91) Георгий Зот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черепа на границе,”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August 6, 2003, <http://gazeta.aif.ru/_/online/aif/1189/12_01>. (검색일: 2015. 8.15.).

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단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문제의 우선순위와 그 비중을 파악하면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장기적 과제를 다룰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략적 결정에 의해 행동을 취할 것인데 한미동맹과 중국이라는 두 요인에 대해 이중의 균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두 요소로부터의 부담을 피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제도적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 왔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선호한다. 한국은 러시아의 이 같은 역할 설정을 감안한 대러 통일외교의 논리를 가다듬어야 한다.

둘째, 한국이 통일외교를 펼치는데 있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대할 때 사실상 미중·미러·중러관계에 상위의 가치를 두고 한러 및 북러 관계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전개 가능한 미러 및 중러관계의 패턴을 주시해야 한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악화되어 온 미러관계가 지속된다면 미국을 통한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적거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중러관계가 밀착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중국을 통한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타결된 이란 핵문제는 이 같은 관계의 양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은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해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중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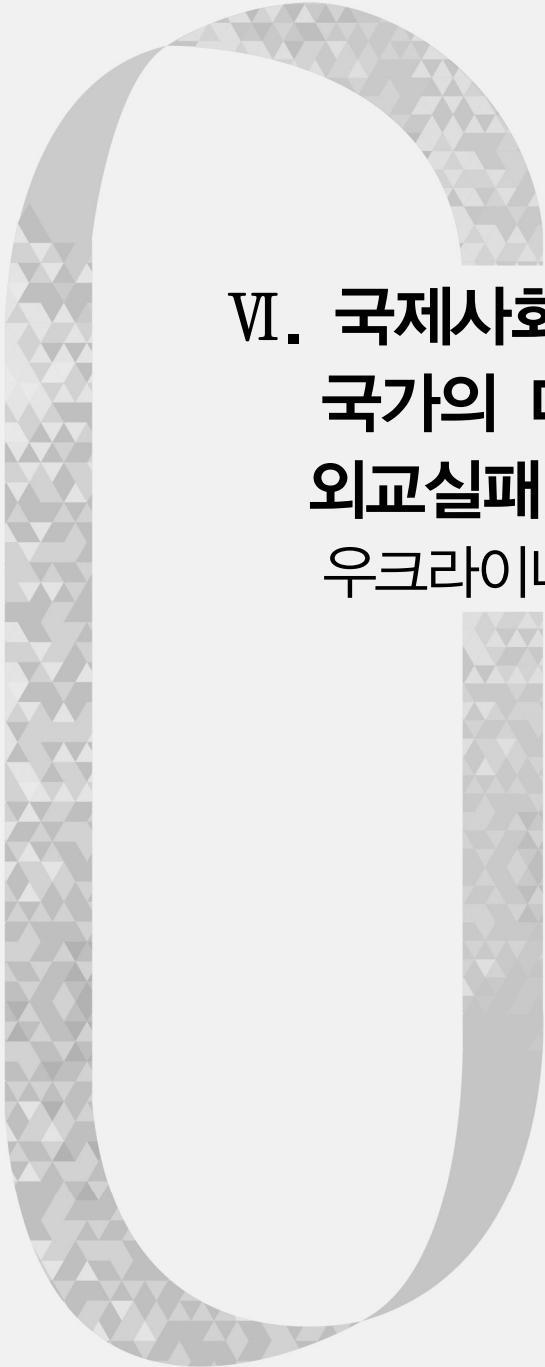
셋째, 한국은 러시아가 중시하고 있는 유엔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시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이나 중국은 상대국이 통일과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I
II
III
IV
V
VI
VII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중국이 독점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에는 중국의 단독 개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유엔이 사실상 유일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 유엔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으며, 열강들 간에 중재도 가능하고, 책임지는 결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안이다.

넷째, 한반도와 관련하여 러시아 내 의견 그룹들이 비록 세력관계가 상이하지만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러시아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내용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푸틴 대통령과 정부기관 및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연구기관 및 인사들이 한국과 접촉하는 주요 루트였고,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변화하기 힘들겠지만, 정부의 공식견해와 달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러시아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상기한 점에 입각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외교는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데 비례하여 예측 불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주도하에서 통일된 한반도가 현재보다 더욱 안정적일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Ⅵ.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對)강대국
외교실패 사례 분석: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현 승 수
통일연구원

1. 들어가며

이 장은 ‘신냉전(New Cold War)’이 운위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갈등과 분쟁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탈소(post-Soviet) 국가들의 외교정향을 분석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초점을 맞춰 신생 독립국가들의 대강대국 외교실패 사례가 외교정향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한 탈소 국가들은 예외 없이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민국가(nation-state)로서의 역사가 거의 없고 또 자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대다수의 탈소 국가들은, ‘소비에트의 유산(Soviet legacy)’을 청산하면서 동시에 국민국가 건설과 체제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신입 회원국으로서 원만히 체제이행에 성공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탈소 국가들은 동(러시아)과 서(유럽)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강대국 편승 전략을, 때로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사하면서 약소국으로서의 생존정책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의 경우는 명확한 반러시아·친서방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 세계 정치의 갈등인자로 부상하였는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그루지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지아는 2003년 ‘장미혁명’으로 집권한 사카슈빌리(Mikhail Saakashvili) 정권하에서 노골적인 친미·친서방 외교노선을 추구한 결과,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대러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고립 국면에 처해 있다. 또 우크라이나는 2013년 말부터 시작된 반러·친서방 시위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I

II

III

IV

V

VI

VII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친러파 무장 세력이 독립을 선포하는 등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의 단초가 되었다.

상기한 문제의식하에서 이 장은 탈소 국가들의 '외교정향'이 체제전환 및 국민국가 수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고찰한 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강대국 외교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외교정향은 이들 국가가 경험한 세계사적 비극, 즉 러시아와의 분쟁 및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적 곤란과 국토 분단의 직접적 원인이다. 대강대국 외교에서 다변화와 균형전략을 취한 여타 탈소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가 외교정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국제환경,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상기한 두 국가의 사례가 4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아 보고, 이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2. 탈소 신생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외교정향

가. 탈소 신생국의 체제전환과 국민국가 수립

우크라이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타라스 쿠시오(Taras Kuzio)는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가 4종의 전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소련의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와 국민을 창출하며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⁹²⁾ 그러나 4종의 과제에 직면한 것은 비단 우크라이나만은 아니었다. 1991년 12월, 소연방이 정식으로 해체된 후 독립을 맞은 탈소 신생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자 유사한 다중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 대다수 탈소 신생국들은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nation-state)를 수립한 역사가 일천하거나 혹은 전무했다. 그들의 국경은 소연방 성립기인 1920~1930년대 소비에트 정권의 독단과 편견에 따라 획정된 것이었으며, 70년간의 연방 존속 기간 동안 130개 이상의 민족들이 뒤섞여 ‘소비에트인(Homo Sovieticus)’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간 까닭에 민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잠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를 포함해 새로 독립한 신생 탈소 국가들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민주의(nationalism)와 분리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북캅카스 지역의 소수 민족인 체첸인들의 분리 독립 투쟁이 중앙 정부와의 갈등을 빚다가 두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위치해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비에트 무신론체제하에서 억눌려 있던 이슬람주의 세력이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각국의 세속 정권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타지키스탄에서는 세속파(구공산당 계열)와 이슬람주의 세력의 충돌이 5년(1992~1997년) 내전으로 장기화되기도 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한 남캅카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 민족들 사이의 영토·민족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과 같은 국제분쟁으로 확대되었다.

⁹²⁾ Taras Kuzio, “The National Factor in Ukraine’s Quadruple Transition,” *Contemporary Politics*, vol. 6, no. 2 (2000), pp. 143~164.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은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했으며, 서방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으로 국민을 통합하면서 70년을 지탱해 왔다. 그러던 것이, 1985년 집권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소련 각지에는 시장이 들어서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용되었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형태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던 시도가 결국 소련 해체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분석이 적지 않다.

모든 경제활동이 모스크바에 있는 연방 중앙 정부의 통제와 배분하에서 이루어지던 소비에트 경제시스템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강요받았던 탈소 국가들의 시행착오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시장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발전과 국내정치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체제전환이 시작되고 25년이 지난 현재, 탈소 국가들의 경제는 나라마다 다양한 수준을 보인다. 천연자원, 그 중에서도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의 경제수준은 자원 빈국인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비해 훨씬 높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의 경우는 러시아나 주변의 자원 부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정치나 사회 불안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탈소 신생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를 천명하며 헌법상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패와 족벌 정치 등의 문제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소연방의 소멸로 독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fall from the sky)’ 식으로 주어졌던 까닭에 탈소 각국에는 구공산당

계열의 엘리트들이 그대로 권력을 승계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과 장기 독재를 낳았고,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신흥 재벌(올리가르히) 현상과 연계되면서 시장개혁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어렵게 했다.

일부 학자들은 탈소 신생국들이 경험한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소비에트의 유산’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70년간 소연방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체질적으로 축적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유산을 단시간 내에 청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⁹³⁾

나. 외교정향의 문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탈소 신생국들의 외교정향이였다. 오늘날 탈소 국가들의 외교정향은 극단적인 친서방(미, EU, NATO)에서부터 극단적인 친러시아까지 차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림 VI-1 탈소 국가들의 외교정향

친서방	중립	친러시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처: 저자 작성.

⁹³⁾ 예를 들어 다음 문헌을 참조. Charles H. Fairbank Jr., “Georgia’s Soviet Legacy,” *Journal of Democracy*, vol. 21, no. 1 (January 2010), pp. 144~151; Taras Kuzio, “Ukraine: Coming to Terms with the Soviet Legac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4, no. 4 (1998), pp. 1~27.

I
II
III
IV
V
VI
VII

다소 거친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그림 VI-1>에서 보듯, 극단적인 친서방 국가에는 발트 3국 이외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중립적인 입장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극단적인 친러국가에는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가 포진되어 있다.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2015년 현 시점에도 이들 국가의 외교정향이 물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5년간 국제 환경의 변화와 국내정치 세력 간 관계, 그리고 각국 리더십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변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의 정서와 정권의 외교정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러나 대체로 친서방적 외교정향과 친러시아적 외교정향은 상호 대척점에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양 대척을 오가면서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다.

발트 3국은 유럽 문명에 속해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 강제 편입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국은 소연방 해체를 전후한 1990년에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와 독립을 선언하고 2004년 NATO와 EU로 편입하였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선 것도 발트 3국이었으며, 이들은 독립 이후 러시아 주도로 출범한 구소련 지역 통합체인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완전히 유럽의 일원으로 정착한 발트 3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탈소국의 외교정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내에 영토·민족 분쟁이 발생한 국가일수록 국민 사이에 반러 성향이 강하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위협의식 때문이다. <그림 VI-1>에서 친서방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 모두 독립 직후 영토·민족 분쟁을 경험했으며 러시아가 현지 정권에 대립하는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한 역사를 공유한다. 따

라서,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EU 및 NATO에 가입하기를 강하게 희망하며, 이것이 국제정치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과 대립의 단초를 제공한다.

둘째,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반러 성향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친러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국경의 인접 여하는 외교정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역사적 연원에 따른 감정과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 문제가 더 중요한 인자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과거 러시아에게 병합당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자기 민족 정체성 회복으로 보는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적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했고 또 현지 주민과 러시아인들 사이의 역사적 유대가 강했기 때문에 독립 초기 반러주의가 분출하지도 않았으며 외교정향에 드러나지도 않았다.

셋째,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들, 특히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일수록 친러성향을 보이며 부존자원이 풍부하거나 경제발전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러시아로부터의 외교적 독립성이 강하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반러시아·친서방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정향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세계 굴지의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EU 가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 친서방 외교정향을 유지하면서도 노골적인 반러 외교정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카자흐스탄 역시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면서 탈소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외교정향은 친러에 가까운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영세중립국을 표방한 이래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독립적인 외교정향을 유지해 오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이상에서 보듯, 러시아와의 국경 인접 여부나 자원의 유무, 경제적 자립도보다는 역사적 연원과 민족 정체성이 탈소 국가들의 반러·친서방적 외교정향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민족이 신생 독립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가 외교정향에 반영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러시아와의 분쟁 유무에 있다. 소비에트의 유산으로서 발생한 영토·민족 분쟁이 러시아의 개입을 유발하고 이것이 탈소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됨으로써 반러·친서방 외교정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고찰하게 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다. 탈소 유라시아 국제정치에서 외교정향의 함의

탈소 국가들의 외교정향은 일국 단위에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지역 전체, 더 나아가 국제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소련 해체 직후, 소 연방이 점하고 있던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은 15개의 크고 작은 탈소 후에 국가들의 정치·경제 공간으로 대체되었으며, 러시아가 초기에 친미·친서방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는 모처럼의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 갖고 있던 광활한 영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적·군사적 자산을 함께 상실했다. 러시아 자신이 여의치 않게 진행되는 체제전환과 시장개혁에 전전공공하느라 신생 독립국가들의 내정이나 외교에 개입 혹은 간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1994년 발발한 체첸 분쟁과 1997년 몰아닥친 국가부도 사태는 러시아가 서방에 기대하던 장미빛 미래에 대한 사형선고장과 다름없었다.

반면,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면서 세계 정치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으며 과거 소련이 위치해 있던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 나갔다.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밀레니엄의 전환기에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으로 인해 미국과 서방의 세계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2000년 5월, 옐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푸틴은 러시아가 처한 비참한 현실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지나친 친서방 외교를 지목했다. 그는 소련의 붕괴 자체가 서방의 음모였고 러시아가 소련의 계승 국가로서 새로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전체가 미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집권 초기, 이미 사유화된 에너지 및 군수 기업들을 재(再)국유화하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농단하던 신흥 재벌들을 정리한 푸틴은 매마침 붙어 닦친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러시아의 경제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옛 소련 권역에서 상실했던 전략적 자산의 회수 작업을 전개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과 밀월관계가 조성된 것도 푸틴이 ‘강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일조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테러작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 푸틴의 러시아는 다양한 국제 사안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에너지자원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프로젝트를 상당 정도 완수했다.

2003~2005년 탈소 국가들 가운데 반러 성향이 강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빈국 키르기스스탄에서 잇따라 ‘색깔혁명

I
II
III
IV
V
VI
VII

(Color Revolution)'이 발생하고 친미·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형성됐던 밀월관계는 중지부를 찍었다. 푸틴은 NATO의 동방확대 정책이 러시아 안보에 최대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색깔혁명을 러시아와 탈소국 정권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음모로 인식했다. 이제 탈소 국가들의 외교정향은 단순히 각국이 동과 서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탈냉전 세계질서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일종의 실험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3. 우크라이나의 사례

가. 우크라이나 국가·국민 정체성의 딜레마

소연방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탈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로 인식되었다. 러시아에 뒤이은 광대한 영토를 점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에 세계적인 곡창 지대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 시기에 지어진 군산복합체와 중공업 기반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경제발전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냉전종식 이후 새롭게 NATO와 EU로 편입된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구식 민주주의 정착과 체제전환이 중앙아시아나 카프카스 국가들에 비해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난 25년 간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과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시행착오와 혼란의 연속이었으며, 탈소 공간에서 내전을 경험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되기에 이른다. 우

크라이나가 겪은 두 차례의 정변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닌 외교적 정향과 직결되며, 이는 ‘동(러시아)과 서(유럽)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와 국민이 직면해야 했던 정체성 위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독립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 초기에 국가·민족 정체성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이것이 외교정향으로 표출될 때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혼란을 조장했던 것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국가·국민 정체성을 모색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음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바, 그 역사적 연원의 이해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시작을 9~13세기에 번성했던 ‘키예프 루시(Kiev Rus’, 키예프 대공국)’로 본다. 동 국가는 그 이름이 시사하듯, 현재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에 세워졌던 동슬라브족 최초의 국가였으며 1240년 몽골의 침입으로 붕괴될 때까지 동슬라브족 공동체의 중심으로 존속했다. 문제는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슬라브계 국가들에서 모두 키예프 루시가 자국 혹은 자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역사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키예프 루시의 정체성이 놓여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라는 국명 혹은 민족명은 19세기 이전 역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들어서 있는 지역 가운데 중부 및 동남부는 오랜 기간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주로 ‘소러시아(Little Russia)’로 불려 왔다.⁹⁴⁾ 17세기부터 이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의 입식이 활발했고 민족 혼합은 소련 시기까지 이어

I
II
III
IV
V
VI
VII

졌다. 반면, 갈리시아(Galicia), 볼히니아(Volhynia), 이바노프란코프스크(Ivano-Frankovsk) 등의 서부 지역은 1918년까지 폴란드-리투아니아 공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합스부르크) 제국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유럽 문화의 전통을 계승했고 러시아보다는 폴란드 등 주변 중동부 유럽 민족들의 영향을 오래 받았다. 따라서, 같은 우크라이나 민족이면서도 서부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반러 성향이 강하며 유럽 지향성이 두드러진다.⁹⁵⁾

그러던 것이, 19세기 말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사조가 유행하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민족주의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지역 지식인들은 우크라이나인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러시아인이나 주변 민족들과는 다르며,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독립적인 정치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된 직후인 1918년 1월, 러시아 지배하에 있던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낳은 산물이었다. 이후,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있던 동부 지역은 1922년 소연방에 편입되지만 폴란드와 헝가리에 귀속해 있던 서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소비에트 적군에 의해 정식으로 소련에 편입된다.⁹⁶⁾ 따라서, 소련 시기 성립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후예 국가인 현재의 우크라이나 공화국에는 서부와 동부 사이에 뚜렷한 국가·민족 정체성의

94) 1654년 페레야슬라프(Pereyaslav) 조약으로 중부 및 동남부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은 제정 러시아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95) 15세기 중반까지 키예프 대공국의 영역은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그 사이, 동슬라브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는 키예프에서 모스크바 지역으로 옮겨갔으며,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은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등 강대국의 예속 상태에 있었다.

96)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1918년 11월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폴란드의 무력 개입으로 독립에 실패하고 1919년 갈리시아-볼히니아는 폴란드에, 이바노프란코프스크는 헝가리에 귀속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소련에 병합된다.

구별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체제전환과 국민국가 형성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끝단에 위치한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에 속했던 영토였다가 1954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시초프가 페레야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친선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편입시킨 땅이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특별히 러시아인 인구가 우크라이나인 인구를 넘어설 정도여서 주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곳이다. 이 같은 역사적 경위가 신생 우크라이나의 국가 일체성 확립과 국민 통합을 어렵게 했고, 결국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데 근거를 제공했다.

독립 이후 25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 위기는 전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역내 지역 및 민족 갈등이 ‘동이나 서냐’ 식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외교정향을 조장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균형 있는 외교정책 추진을 저해해 왔고, 러시아의 개입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의 총인구 5200만 명 가운데 우크라이나인은 37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7%, 러시아인은 1130만 명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벨라루스인, 몰도바인 등 소련 각지의 거주 민족들 그리고 폴란드인, 헝가리인, 유태인 등 주변 동구권 국가 거주 민족들이었다. 소연방 해체 직전에 실시된 공식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총 130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단 우크라이나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에트인’을 창출하려던 소련 정부의 민족정책으로 인해 민족 간 통혼과 연방 내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1940년대

I
II
III
IV
V
VI
VII

스탈린이 추진한 일부 민족들에 대한 강제 이주정책 또한 소련 각 지역의 다민족성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따라서, 소련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는 대체로 130여개 민족이 혼합되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에트형 다민족주의(internationalism)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심각한 민족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연방 해체와 공화국의 독립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러시아인들이었다. 우크라이나 역내 러시아인들은 주로 공화국의 중·동부 및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연원은 위에서 언급한 소비에트의 이주 장려정책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서 간의 지역 갈등,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크라이나 서부와 동남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 정체성의 이질성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의 외교 지향성으로도 드러난다. 과거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역에 속해 있던 서부 주민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며 러시아인들보다는 주변 중동부 유럽 민족들과 더 큰 동질성을 느낀다. 따라서, 독립 우크라이나가 EU 및 NATO에 통합되어 유럽 국가로서 생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동부와 남부 주민들은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실제로 러시아인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까닭에 친러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불가분으로 보며 또 외교적 정향도 러시아에 두고 있다.

나. 독립 우크라이나의 체제전환과 외교정향

1991년 8월 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레오니트 크라프추크(Leonid Kravchuk)를 초대 대

통령으로 선출했다. 6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크라프추크의 집권기는 국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의가 분출하던 시기로서, 러시아로부터의 안전보장과 국가적 통합성 확립을 위해 민족주의와 반러주의가 정치와 사회 전체를 사로잡았다. 우크라이나가 1992년 5월 CIS 8개 회원국들의 군사동맹체인 ‘집단안보조약’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 탈소 공간에 공동의 평화유지군을 운영하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제안들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절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반해 외교정책의 유럽 지향성은 명확했다. 크라프추크는 폴란드와의 관계회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과 ‘중부 유럽 이니셔티브(Central European Initiative)’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체에 가입하고자 노력했다.⁹⁷⁾ 이 같은 상반된 대응은 독립 초기, 크라프추크와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의 기본인식이 유럽 정체성 모색(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복)에 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7월, 크라프추크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추대된 레오니트 쿠치마(Leonid Kuchma)는 1996년 헌법 채택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11월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는 경제개혁과 국민국가 건설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04년 12월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오렌지혁명’을 유발, 야당 지도자인 빅토르 유셴코(Viktor Yushchenko)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말았다. 범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시작된 오렌지혁명의 기저에는 10년여에 걸친 쿠치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와 누적된 경제난, 고질적인 동서 지역 갈등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혐오감 등이 놓여 있었다.⁹⁸⁾

97) 박정호, 『우크라이나 정치의 이해』 (서울: 좋은땅, 2012), pp. 54~55.

98) 우준모, “우크라이나의 국가성 모색,” 『동서연구』, 제23권 1호 (2011), p. 269.

사실 쿠치마는 전통적으로 친러성향이 강한 동부 지역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의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고 양 측의 문화 및 경제공간에 공히 속해 있다고 인식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쿠치마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전임 대통령이나 통치 엘리트들과는 상이한 정치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고 해서 쿠치마가 외교의 유럽 지향성을 포기하고 친러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의 핵심목표인 ‘안보 우선주의 원칙’이 심대하게 손상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 국력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하여 균형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⁹⁹⁾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에서 난제로 남아 있던 흑해함대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된 사실 그리고 양국 우호협력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은 쿠치마의 동서균형외교가 이룬 성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경제지원을 제공하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NATO와 EU 가입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하면서 러우관계는 다시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일원으로 정식 승인하기에도 무리가 따랐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에 필수조건인 민주화 수준과 경제발전 정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또 ‘쿠치마게이트(Kuchmagate)’로 불리는 일련의 부패 관련 스캔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서방의 신뢰감도 저하되고 있었다.

99) 박정호, 『우크라이나 정치의 이해』, pp. 56~57.

더욱이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경제회복에 힘입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고 2001년 9·11 사건으로 인해 미러 간 밀월관계가 형성되면서 쿠치마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날로 거세지는 국내 혼란에 위협을 느낀 쿠치마는 러시아에 대한 접근으로 외교노선을 급선회했다. 2003년 2월, CIS 4개 회원국들과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을 창설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2004년 대선 과정에서는 친러성향의 후보인 야누코비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동과 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쿠치마의 노력은 결국 현실적인 국제적 역학관계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동서 갈등을 부추겨 결국 2004년의 오렌지혁명을 불러왔던 것이다.

한편, 혁명으로 집권에 성공한 유셴코 정권의 5년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향성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심화시킨 결정적 시기였다. 그는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네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첫째, 유럽-대서양 통합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우크라이나 대외정책의 최우선 관심사이며, 이를 위해 NATO 및 EU와의 단계적 관계개선을 통해 통합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 10년 안에 양대 기구에 가입을 달성함으로써 유럽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탈러 행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미미한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해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셋째는 미국과의 양자관계 발전, 그리고 넷째는 탈소 공간에서 우크라이나가 리더 국가로서 성장한다는 것이다.¹⁰⁰⁾ 탈소 공간에 구축된 반러협력체 GUAM

100) 위의 책, pp. 60~61.

I
II
III
IV
V
VI
VII

(Georgia, Ukraine, Azerbaijan, and Moldova)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셴코 집권기 동안 우크라이나와 NATO 관계가 현격하게 심화 발전된 것은 사실이다. 쿠치마가 삭제한 군사 독트린 안의 NATO 및 EU 가입 목표에 대한 조향이 복원되었고,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PfP)’을 통한 NATO와의 장기 협력 추진, 대이라크 평화유지군 파병 등 서방에 대한 협력정책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수위도 올라갔다. 2005년 12월, 러시아는 CIS 가입국들 가운데 탈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그리고 조지아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 오던 가스 공급 특혜 가격을 철폐하고 시장가격 원칙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가격의 인상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가스 분쟁이 서방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동시에 NATO의 동방확대 정책을 경고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으로 이 사태를 분석했다.

가스 분쟁은 우크라이나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 사건으로 촉발된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2006년 3월 총선에서 유셴코에 정치적 상처를 입혔고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한 EU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그의 친서방 외교는 위기로 내몰렸다.

다.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의 외교적 선택

2010년 대통령에 선출된 야누코비치는 대표적인 친러파 정치인이었던 만큼 취임 직후부터 친러시아적인 외교정책들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임 정권에서 마련해 놓은 EU 통합 프로세스를 일거에

무효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집권 초기인 2010년 4월, 하리코프 협정을 통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둔 기한을 204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EU와의 연합협정 체결 교섭도 계속해나갔다. 하지만 동 협정이 막상 조인될 순간이 되자 그는 조인식을 뒤로 미루면서 친서방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2014년 2월 자신의 퇴진을 초래한 마이단 사태를 불러 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중심가에 위치한 마이단(Maidan) 광장이 반러·친서방 시위대의 상징이 됨으로써 붙여진 마이단 정치운동을 일부에서는 2004년 발생한 오렌지혁명의 완성이로 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마이단 세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연합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행사했고 야누코비치가 유럽으로 가야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쪽으로 되돌리려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마이단 사태 이후,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중부와 서부에서는 친서방 세력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며 2014년 5월 25일 실시한 대선을 통해 전임 정권에서 경제발전무역부 장관 출신인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뒤이어 치러진 10월 26일 총선에서도 친미·친서방 세력이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했음은 당연했다. 포로셴코는 6월 27일 EU와의 연합협정에 조인했다.

한편, 야누코비치와 그를 지원하는 러시아 그리고 친러성향이 강한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마이단 세력의 배후에 미국과 서방이 있다고 의심하며 포로셴코의 친서방 노선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결국 크림반도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편입을 성사시켰고, 동남부 지역의 도네츠크(Donetsk)와 루간스크(Lugansk) 주는 친러파 무장 세력이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키예프 중앙 정부와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15년 9월 현재, 우크

I

II

III

IV

V

VI

VII

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분쟁 확대 가능성을 잠재한 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실에 경악하면서 대리경제제재를 발동시키는 한편, 푸틴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독립 우크라이나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대부분 러시아와의 관계설정과 인과적으로 얽혀 있음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으로 외교정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어 왔다. 한마디로, 러시아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국가 존립이 좌우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EU 등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여기에도 역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왔다.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이 등장한 200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EU와 NATO의 동방 확대를 러시아에 대한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반대로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문명적 우위를 담보하고 유럽의 지정학적 판세를 확대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유로마이단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문제 등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 문제는 우크라이나 신정권의 극단적인 외교적 선택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가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으며 오늘날 신냉전을 운위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의 해결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조지아의 사례

가. 독립 조지아의 민족 문제와 외교정향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남캅카스 지역의 소국(小國) 조지아는 4,660만 인구의 84%가 조지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민족 구성비에서 명목민족인 조지아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해발 5,000미터 이상의 고산준령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조지아는 늘 제국들 사이에서 때로는 정복당하고 때로는 편승이라는 생존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들만의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면서도 초기 국가인 이베리아(Iberia) 왕국이 4세기 초, 동방정교(Orthodox Christianity)를 국교로 수용한 이후, 조지아인들은 이슬람 문명에 대항하는 기독교 문명의 전선(front) 내지는 보루(堡壘)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서 터키나 이란(페르시아) 등 이슬람 제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견뎌 왔다.¹⁰¹⁾ 1783년 조지아 카르틀리-카헤티(Kartli-Kakheti) 왕국의 군주였던 에레클레(Erekle) 2세가 러시아 제국에 보호국이 되기를 자청해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후, 제정 러시아는 1800년 조지아 전역을 러시아 제국에 편입하였으며, 1917년 제정 러시아가 소멸되자 조지아인들이 독립공화국을 수립했지만 1921년 볼셰비키 적군에 의해 소멸된 후, 1936년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재편되었다. 조지아인들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신생 조지아 공화국을 1920년대 단명으로

¹⁰¹⁾ Stephen Jones, "The Role of Cultural Paradigms in Georgian Foreign Policy," in *Ideology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communist Foreign Policies*, ed. Rick Fawn (London: Frank Cass, 2004), p. 91.

I
II
III
IV
V
VI
VII

끝난 제1공화국의 정통 계승 국가로 표방하고 있다.

조지아는 여타 탈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비에트의 유산’을 승계했지만, 그 부작용이 가장 격렬하게 노정된 곳이기도 했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수월하지 않았던 데다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신생 조지아 공화국 자체의 국민·국가 정체성 문제였다. 독립 조지아 공화국 영내에는 민족적으로 조지아인들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다른 탈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다민족 국가였다. 특히 공화국 영내에는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두 개의 자치 지역이 편입되어 있었는데, 남오세티야 자치주와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이 그것이었다. 전자는 캅카스의 소수민족인 오세트 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이었고, 후자는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인 압하스 족들의 거주 지역이었다. 이들 두 개 민족은 소련 당시부터 조지아인들과의 민족적 상이(相異) 때문에 독립공화국으로의 지위를 요구한 역사적 경위가 있었는데, 조지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이들의 분리·독립 요구가 격렬해지면서 분쟁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비에트 민족 문제의 제도적·구조적 유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1991년 소련의 해체를 전후해 조지아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를 비롯한 조지아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었다.¹⁰²⁾ 1991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초대 대통령에

102) 조지아인들의 민족주의, 즉 종족적 국민주의는 12세기 조지아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기독교적 메시아 이념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이념에 따르면, 예수가 조지아어를 사용했고 성모 마리아가 조지아 땅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파벳이라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일리아 차차바제(Ilia Chavchavadze)는 이를 ‘언어, 고지(故地), 종교’의 원리로 개념화했으며, 문예비평가 출신인 감사후르디아는 스스로를 차차바제의 추종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배타적 종족 국민주의를 주창했다. 현승수,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종족 국민주의와 시민 국민주의의 착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선출된 감사후르디아는 이미 대통령에 선출되기 전부터 독립 조지아가 조지아 민족의 나라임을 천명하며 소수민족들과 충돌했고 남오세티야 자치주의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양측 간 유혈 충돌이 2년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¹⁰³⁾ 혹독한 언론 통제와 반대파 탄압으로 내전을 초래했다가 결국 쿠데타로 축출된 감사후르디아는 1년 남짓한 집권기 동안 사회 전체에 팽배한 극단적 반러주의를 이용해 신생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고 국내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의 뒤를 이어 1995년 11월 집권한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는 주지하다시피 소련의 마지막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서 조지아 출신이기는 했으나 민족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에 더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는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추진했던 신사고(New Thinking) 외교를 주도한 개혁 성향의 소유자이기도 한만큼, 집권 초기에 극단적인 혼란상을 보이던 정국을 안정시키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은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또 배타적인 종족적 국민주의(ethnic nationalism)를 지양하고, 다민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비(非)조지아계 민족들의 자치와 참정권을 대폭 인정하는 한편 민족 차별 없이 공화국 영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진보적인 유럽형 시민 국민주의적(civic nationalism) 정책을

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역음, 『유라시아지역 민족주의 정치』 (서울: 민족원, 2015), pp. 406~407.

103) 1990년 12월 시작된 오세트 족들과의 민족 분쟁은 러시아의 중재로 조지아 중앙 정부와 남오세티야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92년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입하지아에서는 감사후르디아가 이미 권좌에서 축출된 이후인 1992년 8월에 분쟁이 발생하여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동 분쟁에도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섰으며 결국 조지아 중앙 정부의 군사적 패배로 끝을 맺었다. 현승수,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역음,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파주: 한울, 2012), p. 391.

I
II
III
IV
V
VI
VII

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이 조지아 사회에 만연한 자민족 중심주의와 정치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소수민족 지위에 관한 법률이나 언어법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묶여 있었고 선거법이 바뀌어도 소수민족들의 의회 진출은 여전히 어려웠다. 거기에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경제난,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형국이었다. 세바르드나제는 집권 말기에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채 권위주의적 성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급진적 개혁을 주창하는 신예 정치가들과 대립하면서 2003년 장미혁명으로 권좌에서 밀려나고 만다.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감사후르디아나 세바르드나제 모두 친유럽적 성향을 보인 인물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다소 다르다. 감사후르디아는 반러시아적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었으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재연될 경우 유럽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조지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순수 조지아성(Georgianness), 또 그 확대된 정체성으로서 캅카스성(Caucasianness)을 중시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권기인 1990년대 초기에는 아직 EU가 창설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통합된 제도로서의 유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지아가 유럽 통합 기구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했다.¹⁰⁴⁾

한편, 세바르드나제의 발언 속에서 조지아 외교의 유럽정향을 찾기는 힘들다. 그는 소련의 마지막 외무장관을 역임했던 소비에트형 지식인으로서 조지아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것 같지는 않다.

104) EU는 1993년 11월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더욱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줄곧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부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급적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으며, 정책이나 개인적 발언 속에 유럽 지향성을 드러내지도 않았다.¹⁰⁵⁾

다만, 세바르드나제의 집권 초기인 1995년부터 EU가 조지아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시하자 대통령과 통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유럽에 대한 기대가 점차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EU와 조지아 사이에 동반자 관계 및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논의되면서 조지아 정부는 유럽 통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바르드나제에게 유럽은 지원 시혜국 이상은 아니었으며 정체성의 귀속 대상도 아니었다. 그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예찬하고 조지아가 유럽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을 종종 했지만 그것이 발언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 임기가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리도, 또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장미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나. 유럽 지향성과 장미혁명

조지아 사회 안에서 유럽 지향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였으며, 집권당 내부의 젊은 개혁가들이 조직한 ‘조지아시민연대(Citizen’s Union of Georgia: CUG)’가 그 중

¹⁰⁵⁾ Donnacha Ó Beacháin and Frederik Coene, “Go West: Georgia’s European Identity and Its Role i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Nationalities Papers*, vol. 42, no. 6 (2014), p. 929.

심에 있었다. 1999년 4월,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에 조지아가 정식으로 가입한 사건은 CUG 세력에게 ‘유럽 회귀’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쾌거로 인식되었다.

조지아의 유럽 회귀는 세바르드나제 퇴진 운동의 핵심 명제이자 곧 장미혁명의 테제였다. 2003년 11월 장미혁명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사카슈빌리는 세바르드나제가 추진했던 대외정책 균형조치(foreign policy balancing act)가 강대국, 특히 러시아와의 원만한 관계를 중요시한 나머지 조지아의 유럽 정체성 회복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다.¹⁰⁶⁾ 사카슈빌리와 혁명 세력은 조지아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빈곤과 부패 그리고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아자라(Adjara) 등 지역의 분리주의 문제가 조지아의 국가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성을 회복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⁰⁷⁾ 즉, 부패한 정권을 퇴진시키고 강력한 국민국가 수립과 실지(失地) 회복, 추락한 국민적 자존심과 조지아의 국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유럽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 이후 새로 제정된 국기에서 기독교 문양이 강조된 사실이나 전국의 주요 관공서에 EU 국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토록 한 조치 등은 혁명 정부가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취임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집권기 동안 반러시아·친서방 외교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사카슈빌리는 장미혁명을 통해 조지아인들이 비민주적이고 어두운 소비에트의 과거에 결별을 고하고 보다 밝고 전망있는 유럽식 민주주의의 미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처럼, 조지아의 유럽화는 조지아

¹⁰⁶⁾ *Ibid.*, p. 923.

¹⁰⁷⁾ 아자라의 지역 수장인 아슬란 아바시제(Aslan Abashidze)는 트빌리시 중앙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카슈빌리는 2004년 아자라를 통합했고 아바시제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인들의 정체성 속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적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사카슈빌리는 조지아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유럽과 EU가 조지아를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⁸⁾ 조지아가 무너지면 유럽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혁명 세력은 조지아를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들이 지향하는 유럽 조지아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부패가 없는 청정 국가였고, 유럽 국가들과 서구식 자유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최종적으로 유럽·대서양 세력으로 통합하게 될 국가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EU는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조지아에게는 하나의 롤모델이었으므로 전임 정권이 무시해 왔던 EU와의 동반자 및 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편, 장미혁명 세력에 대한 EU의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조지아를 포함한 남캅카스 지역 3국 모두에게 새로운 유럽근린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 ENP)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증거였다. 이 정책은 EU가 동부나 남부 근린 국가들에 대해 정식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약속 없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¹⁰⁹⁾ 사실상 조지아는 EU에게 있어서 남캅카스 지역전략의 실험대라고 할 수 있었다.¹¹⁰⁾

¹⁰⁸⁾ M. Müller, “Public Opinion toward the European Union in Georgia,” *Post-Soviet Affairs*, vol. 27, no. 1 (2011), p. 64.

¹⁰⁹⁾ Sami Moisiu *et al.*, “Mapping the Political Geographies of Europeanization: National Discourses, External Perceptions and the Question of Popular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6 (2013), pp. 748~749.

I
II
III
IV
V
VI
VII

사카슈빌리가 자신의 집권기 동안 조지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럽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다. 국가의 공식문서에는 유럽 지향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장들이 도처에 삽입되었으며 유럽으로의 제도적 통합이 대외정책의 최종 목표임도 명시되었다.¹¹⁰⁾ 혁명 이후, 조지아의 민주주의 진척과 부패 척결, 경제발전 등을 보여주는 국제 지수가 상당 수준 향상된 것은 조지아의 유럽 회귀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증거로 선전되었다. 때문에 사카슈빌리는 집권 초기부터 자기 개혁에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면서 혁명을 수출하는 데 열성적이었다. 특히 장미혁명의 성공은 중국적으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등 실지(失地)의 재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분리주의 문제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옛 소련 국가들에게는 전범(典範)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 같은 사카슈빌리의 인식은 조지아가 NATO와 EU의 일원이 되면 유럽 국가들이 실지 회복에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의미했다. 사카슈빌리는 유럽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을 불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¹¹²⁾

110) 조지아는 EU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NATO와의 협력에 참가했다. 1994년에는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PfP)’ 프로그램에, 1999년에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계획 및 검토 프로세스(PfP Planning and Review Process)’에 참여했다.

111) Stephen Jones, “The Role of Cultural Paradigms in Georgian Foreign Policy,” in *Ideology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communist Foreign Policies*, ed. Rick Fawn, p. 98 참조.

112) 사카슈빌리가 2005년 2월 10일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 교서를 참조. 한편,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조지아 정계와 학계, 사회 일각에서는 유럽 지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노동당 당수인 샬바 나텔라슈빌리(Shalva Natelashvili)나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카카 벤두키제(Kakha Bendukidze)가 대표적 사례다. 특히 벤두키제는 사카슈빌리 정권의 경제개혁을 담당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사카슈빌리의 급진적인 친서방 정책이 푸틴 러시아에게는 지정학적·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푸틴 집권기에 펴낸 러시아의 안보 개념, 외교정책 개념 등의 공식문서에는 NATO의 동방 확대야말로 러시아가 직면한 최대의 위협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등 탈소 국가들의 ‘친서원로(親西遠露)’ 노선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¹¹³⁾

러시아는 조지아의 친서방 노선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 문제를 이용했다.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던 것이다.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될 무렵, 조지아군은 남오세티야 자치주를 무력으로 공격했다. 사카슈빌리는 올림픽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평화 열기로 들끓는 시기이니만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반격을 가해 오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만일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 미국과 서방이 조지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이 오판이었음은 이내 드러났다. 8월 9일, 러시아군은 남오세티야의 주도인 츠хин발리(Tskhinvali)로 진격했고 뒤이어 조지아 영내로 공습을 확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카슈빌리가 원하던 서방의 군사적 지원은 없었으며 서방 국가들의 대러 비난도 말잔치에 그치고 말았다. 남오세티야를 장악한 러시아는 동 지역에 러시아군 주둔을 확정짓고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조지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던 압하

113) 2014년 12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공식 군사독트린 문서는 러시아가 직면한 외부로부터의 주요 군사적 위협들 가운데 NATO의 동방 확대를 으뜸으로 꼽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적 잠재력이 증강되고 있는 점, 동 기구에 대해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범지구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 점, 동 블록(NATO - 역자주)의 가일층 확대를 포함하여 NATO 가입국의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연방의 국경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Vladimir Putin, “Voennaya Doktrina Rossiiskoi Federatsii,”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ember 2014), <<http://news.kremlin.ru/media/events/files/41d527556bec8deb3530.pdf>>. (검색일: 2015.11.16.).

지야 자치공화국도 덩달아 러시아 정부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들 2개 국가는 비록 국제법상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의회, 기타 국가기관을 가진 ‘비승인 국가’로 존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소수 국가들이 이들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다. 물론 조지아 중앙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쟁 직후, 조지아는 러시아와 정식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CIS에서 탈퇴했다.

러시아와의 단교는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조지아의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경제제재로 인해 조지아 최대의 수출품인 미네랄워터와 포도주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 이렇다 할 천연 자원이 부재하고 농업이 주요 산업인 조지아에서 러시아에 대한 농산품의 수출 차단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또 조지아인들의 대러 노동이민과 그들이 고국으로 보내오는 송금은 조지아 민간경제를 지탱하는 원천이었다. 그러나 단교조치로 인해 공식적인 노동이민이 금지되었고 송금도 어려워졌으며 러시아 내에 거주하는 조지아인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차별도 심해졌다. 비승인국가화 되어버린 두 개의 분리주의 지역도 조지아의 안보를 위협했다.

집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됐던 사카슈빌리의 내부 개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해 갔다. 초반에 경찰 개혁과 부패 척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EU 등 서방국가들의 평가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업률, 농업 수확량의 감소, 만연한 빈곤은 위에서 언급한 수출길의 차단에 더해 조지아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비승인국가 영토로부터 피난 온 난민들의 수용 문제도 골칫거리였다. 2008년 1월 재선에 성공한 사카슈빌리는 야당과 반체제 인사들을 러시아의 꼬나폴로 낙인찍으며 언론

을 장악하고 점차 권위주의적 체제로서의 성향을 보이면서 유럽의 가치로부터도 멀어져 갔다.

다. 마르그벨라슈빌리 신정권하, 대강대국 외교의 딜레마

2012년 10월 총선에서 반체제 사업가 출신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이끄는 ‘조지아의 꿈’이 여당 ‘통합국민운동’을 앞질러 의회 내 다수석을 차지하고 1년 후 치러진 대선에서 조지아의 꿈이 세운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슈빌리(Giorgi Margvelashvili)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조지아의 꿈은 기본적으로 유럽 지향성을 원칙으로서 천명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임 대통령 역시 연설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단교조치 이후 중단됐던 농산품의 대러수출도 재개됐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조지아의 꿈 정권과 마르그벨라슈빌리의 대통령 당선을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협력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가 다시 외교노선을 친러시아로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방의 시각을 강화시켜 준 것은 신임 정권이 ‘정의 구현’을 표방하면서 전임 사카슈빌리 정권의 유력자들을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 및 체포하는 법적 움직임을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도록 지시하고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사카슈빌리는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주지사로 기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마르그벨라슈빌리 정권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개의 외교과제

I
II
III
IV
V
VI
VII

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이며 또 하나는 EU 가입을 통해 유럽 지향성을 완성하고 NATO 가입을 성사시켜 대서양 횡단(transatlantic) 안보체제에 안착하는 것이다. 조지아 정부는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일종의 ‘병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는 2014년 6월에 브뤼셀에서 EU와 자유무역지대(DCFTA)를 포함하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¹¹⁴⁾ 또한 NATO와 관련해서는 조지아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NATO 가입의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 계획(MAP)’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이 대러안보위협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양자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는 조지아가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상, 조지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가 오히려 더 쥘끄럽다. EU의 안보전략에서 조지아는 안정되고 자유로우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서는, 다시 말해 러시아가 조지아의 외교노선에 대해 모종의 ‘추인’을 해주지 않는 한, EU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감수하고 조지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¹¹⁵⁾

114) 서명식에 참석한 가리바슈빌리(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EU와의 제휴협정은 경제, 정치 연합을 위한 시발점이자 토대이며, 조지아는 격동의 근현대사의 흐름속에서도 유럽의 가치, 문화를 공유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향후 EU의 일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외교부, “조지아 EU제휴협정 체결(2014. 6.27.)”, (외교부 중유럽과 정세),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65&seqno=10363>>. (검색일: 2015.7.21.).

115) 또, 사카슈빌리와 UNM의 집권기 동안 조지아와 EU의 무역관계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지아 정부는 EU가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NATO 역시 원칙적으로는 조지아의 가입 의지를 환영하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NATO의 동방 확대를 자국에 대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상, NATO가 조지아는 물론 탈소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마음대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¹¹⁶⁾

미국과의 관계도 조지아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사카슈빌리가 조지부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맥을 외교적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보여주듯, 사카슈빌리와 장미혁명 세력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특히 공화당 내에서 로비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집권한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조지아에 대한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사카슈빌리가 일으킨 2008년 8월 전쟁이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인식이었으며, 주지하다시피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초기 러시아와의 관계 재조정(reset)을 선언하면서 메드베데프 정권과 비교적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오바마가 전임 부시 정권의 외교노선을 수정해, 옛 소련 지역인 유라시아에 대한 개입정책을 지양하고 아시아로 회귀하게 된 사실 또한 사카슈빌리에게는 불리한 정세를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¹¹⁷⁾

현재 조지아가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조지아가 유럽 지향성을 포기하던지 러시아가 비승인국가

116) 조지아는 NATO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전폭적으로 협력한 몇 안 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NATO가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지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조지아로부터 얻을 이익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약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훨씬 크다.

117) Neil S. MacFarlane, "Georgia: National Security Concept versus National Security,"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Paper, The Chatham House, August 2012), p. 6, <https://www.chathamhouse.org/sites/files/chathamhouse/public/Research/Russia%20and%20Eurasia/0812pp_macfarlane.pdf>. (검색일: 2015.5.12.).

I
II
III
IV
V
VI
VII

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양국의 관계복원은 대단히 어려울 전망이다. 2012년 총선 직후, NATO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그루슈코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조지아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나는 조지아가 NATO와 이 이상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면 러시아와 NATO 관계는 물론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NATO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물론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정치·외교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국제정세가 조지아에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위협으로 작용할지를 예측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조지아 정부가 외교적 결단을 내려 러시아와의 타협을 성사시키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그 조건은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포기를 의미할 것인바, 반러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 정서가 만연되어 있는 조지아 사회에서 그것은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토적 통합(territorial integrity)에 대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민족주의의 핵심 테제이기 때문이다.

5. 소결: 통일외교에 주는 함의

본문에서 고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취약한 국가·국민 정체성이 국민국가의 창출과 시장경제 이행이라는 중대과업을 어렵게 했으며 그 지난한 도정이 7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퇴적되어 온 소비에트의 유산과 맞물리면서 결국 국제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이들 두 개의 탈소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이반되어 살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있다. 더욱이 두 나라 모두 영토 안에 다양한 소수민족을 갖고 있어 명목민족이 지나친 민족주의적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이들 소수민족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민족·영토 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NATO의 동방 확대를 국가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친서방적 외교정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 민족·영토 분쟁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으며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서 보듯, 무력사용도 불사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강대국 외교실패 사례는 통일을 위한 외교와 통일 이후의 민족·국가 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주변 민족들과 강대국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장기간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생 독립국 출범 당시, 무엇보다 국가안보의 확립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이는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소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주변국들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엘리트들의 확신과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나라가 겪어온, 또 오늘날 겪고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 경제 및 외교적 곤경은 이들 엘리트의 선택이 옳바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통일에서 우리의 자주적 결정과 선택은 최상의 가치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주변 4강의 이해관계와 득실을 면밀히 계산하면서 정교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가져온 안보적 딜레마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소련 해체 직후, 무엇보다

다 강대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소련의 핵 무기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체제전환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하는 동시에 핵무기도 포기할 것을 천명했다. 물론 핵무기 보유가 우크라이나의 안보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핵포기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크라프추크는 핵무기를 러시아 측에 양도하고 서구와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 받는 편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1994년 1월,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미·러 정상회담이 모여 핵무기 이전과 경제지원 및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관한 3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5대 핵클럽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이를 보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2014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안보 약화를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핵무기의 ‘성급한’ 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체제수호를 위한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력 기조를 훼손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현재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겪고 있는 외우내환이 특정 지역 주민들의 언어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의 통일과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동남부 지역 주민들 사

이에서 키예프 중앙 정부에 대해 표출한 가장 큰 불만은 우크라이나어의 강제사용 정책이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압도적 다수였던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어의 사용과 교육을 규제 및 금지하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될 때마다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으며 이것이 동 주민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갈등과 분쟁의 불씨로 작용했던 것이다. 조지아의 경우도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분리주의를 촉발한 결정적 요인은 조지아어의 강제와 토착 소수민족 언어의 교육 금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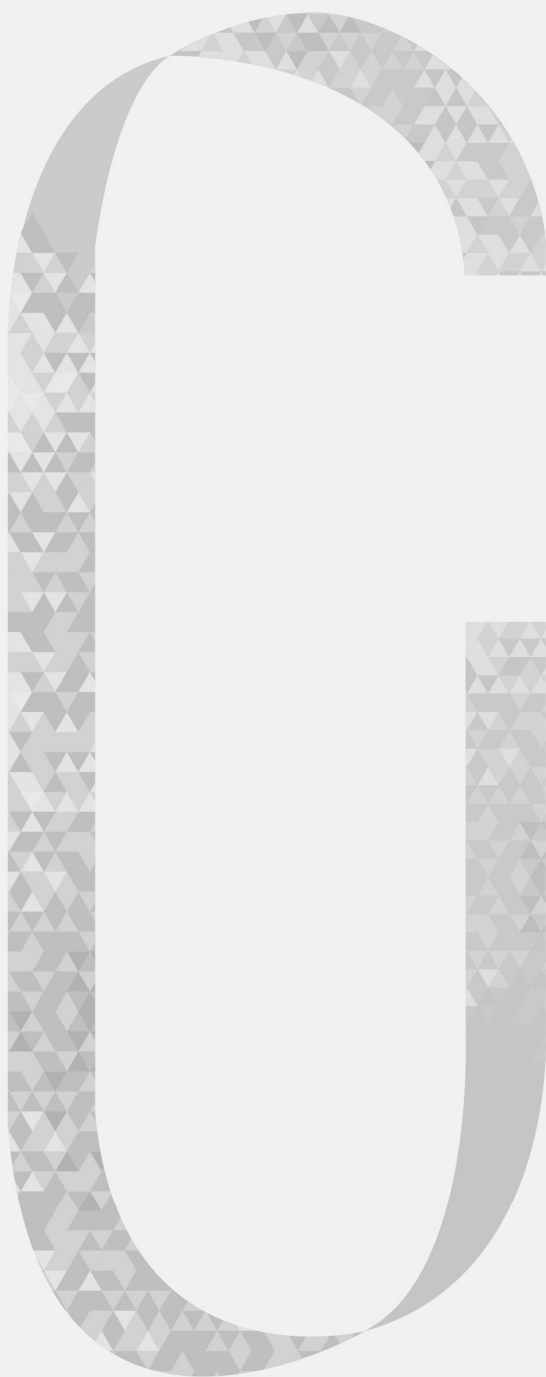
우리의 통일 역시 단일한 민족과 민족어라는, 일견 당연시되어 왔던 ‘고정관념’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70년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의 민족 의식과 언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 수준 동질성을 상실해 왔다. 이는 한반도 양측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통일 혹은 통합 과정에서 북한의 언어 정체성을 무시하고 남한 중심의 구도로 획일화하려 시도할 경우,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과열될 가능성일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에게 안보적 위협을 조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민국가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 내부에도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끝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 관리의 필요성이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서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것이며, 통일한국이 러시아의 국익에 반할 경우, 러시아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데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들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러시

I
II
III
IV
V
VI
VII

아는 통일한반도에서 국경을 접할 인접국이며, 한반도의 상황 전개와 미래의 통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Ⅶ. 결 론

저자일동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먼저 각 국가의 통일외교 전략을 다룬 각 장의 결과를 요약한 후, 다음 절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미 통일외교 전략을 다룬 제Ⅱ장은 미국의 글로벌 아시아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고 미국이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당면한 전략적 과제를 분석한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일국체제의 지속을 꾀하는 가운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동맹/우방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entrapment)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안과 대응을 조장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연루 위험과 안보 딜레마를 완화시키면서 동아시아 안정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문제로 인한 불확실성과 증가하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강대국 논리와 이해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통일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채널의 논의와 협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대미 통일외교는 (1)미국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할 논리(logic)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고, (2)미국과 더불어 통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양국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수준과 채널을 통하여 진행하며, (3)북한문제,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의 연계(link)와 절연(delink)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4)국내적으로 많은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 비전을 완성하고 주변국과 공유하는 작업에 집중

I

II

III

IV

V

VI

VII

해야 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동아시아의 국제안보 및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비용을 상정하고 있는 중국을 다룬다. 중국은 통일한반도 구상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러한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대중 통일외교는 대미·대일·대러 외교보다 더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대중 통일외교의 향후 발전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변수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실행이다. 대중 통일외교의 실행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거리 좁히기는 결국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점진적 발전 또는 급격한 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천안함포격’과 ‘연평도포격’ 등의 국지적 도발 그리고 향후 예견되는 ‘북핵 4차 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침략이 발생하면, 한중 간에 점진적으로 발전된 정치군사적 신뢰가 단번에 무너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북한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활용하고, 이에 대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한중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양국의 정치적 거리 좁히기는 줄곧 지속되어 왔다.¹¹⁸⁾

대일전략을 다룬 제Ⅳ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 외교의 논리 및 전략, 그리고 대일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 향후 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재 아베 신조 총리로 대표되는 자민당 내 주류파별인 보수우익 파벌(호소다파)의 성향과 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한국의 자민당 파벌에 대한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통

118) 배정호 외,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p. 212.

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네 가지 현안(일본인 납북자, 북핵,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통일)을 분석하고, 각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1)한국과 일본의 미들파 워 외교의 실행, (2)일본 정부와 민간 대상 통일외교의 조화, (3)한국, 북한, 한반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일 통일외교를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일관계 및 과거사·영토 문제 등의 해결 혹은 문제의 ‘관리’를 통해 한일관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제V장은 대리전략을 논의한다. 한반도 주변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 주변국 중에서 러시아가 원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장 앞장서 찬성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러시아 극동개발과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로 인한 새로운 동북아 구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요소인 북한이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식 및 통일관은 한국이 추구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과 일치하는 점도 있는 반면, 다소 다른 내용과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 취해야 할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앞서, 필자는 먼저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을 러시아 내 의견 그룹들 및 정부기관, 푸틴 대통령의 견해를 통해 살펴

I
II
III
IV
V
VI
VII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내의 한반도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러시아의 대북 및 남·북·러 협력 구상’, ‘탈북자 대량 이주’ 등의 현안, ‘외교안보 논리’ 등 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영역에서 다른 형태로 발전되는 외교안보 논리처럼 대러 통일외교도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경제협력 문제나 탈북자 이주대책과 같이 단기간의 정책적 구상을 바탕으로 외교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제VI장은 ‘신냉전’으로 불리우는 오늘날의 세계정세 속에서 갈등과 분쟁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탈소(post-Soviet)국가들의 외교정향을 분석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초점을 맞춰 신생 독립국가들의 대강대국 외교실패 사례가 외교정향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외교정향은 이들 국가가 경험한 세계사적 비극, 즉 러시아와의 분쟁 및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적 곤란과 국토 분단의 직접적 원인이다. 대강대국 외교에서 다변화와 균형전략을 취한 여타 탈소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조지아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 국가가 외교정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국제환경,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취약한 국가·국민 정체성은 국민국가의 창출과 시장경제 이행이라는 중대 과업을 어렵게 했다. 결국 그 지난한 도정이 7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퇴적되어 온 소비에트의 유산과 맞물리면서 양국은 국제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이 두 탈소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와 이반되어 살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있다. 더욱이 두 나라 모두 영토 안에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명목민족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이들

소수민족의 반발로 이어져 민족·영토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NATO의 동방 확대를 국가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친서방적 외교정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의 민족·영토 분쟁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서 나타나듯, 러시아는 무력 사용도 불사해왔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강대국 외교실패 사례는 통일을 위한 외교와 통일 이후의 민족·국가 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고려사항

본 보고서는 주로 각국에 특화된 통일외교 전략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의 차원을 뛰어넘는 보편적 통일담론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접근을 통해 각국의 통일외교 전략이 내포할 수 있는 모순과 상호충돌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성 있는 보편적 통일담론을 구축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 간의 통일 담론은 소위 국가별 맞춤형 통일외교 및 담론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재단된 통일 이후의 국가상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편익을 강조하는데 그쳐왔다. 이와 같은 접근은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를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관련국의 이해가 대조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맞춤형 통일편익의 주장은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VI

VII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공통되게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 한반도 정세 안정화(혹은 안보확보) 및 동북아 국제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관문으로서 한국 주도의 통일의 의의를 강조하는 일관된 통일관을 제시하여, 한반도 통일은 국제공공재라는 국제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패권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한반도 분단지속의 비용을 각국에 상대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쟁 가능 지역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동북아 국제정치의 안정화를 위한 경로로서 한반도 통일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관련국 간 상충하는 이해를 고려하여 이슈 간 복합적 모순, 이를 테면 과거역사 인식과 사드 배치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마찰을 ‘이슈별 연계/절연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함으로써 우회하도록 하고, 주요 국가들 중 특정 국가를 즉각적인 역(逆)대상으로 지목하는 국제조직 및 연맹체의 가입을 회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국가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인류보편적 가치를 담은 통일 미래상에 대한 담론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잉 민족주의 및 통일 지상주의가 내포하는 자국 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현상변경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지대하다. 통일한국은 그 자체가 강력한 지역 행위자의 탄생을 의미하며, 통일한국의 외교 안보상의 선택과 결정은 동북아 세력균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4대 강국에 한반도 통일이 경쟁국의 세력 확장으로 인식될 경우, 이들 국가가 적극적 통일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농후하다. 관계국들의 이해 및 우려를 감안하여 한반도 통일로 현상과 다른 핵심이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각

국에 확인시키는 재보장(reassurance)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의 탄생이 독일의 사례와는 다르며, 4대 강국에 도전을 제기할 만한 강국의 출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략적 환경하에서 과잉민족주의적인 통일담론의 확산은 북한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부메랑 효과를 유발하여 국제정치의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적 자결의 원칙 확립으로 외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 중심이 아닌 시민의 복지와 선택이 투영되는,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 및 담론에 기초한 시민국가적인 통일관을 확립하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 획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통일의 국제 주류화(mainstreaming)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국제사회는 광범위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물로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으로 직면하는 이슈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슈의 국제화가 심화되면서 다자간, 다면적 협의 채널의 증가 및 활성화 추세도 강화되었다. 이제 그 부산물로 다양하게 급증한 국제 채널 및 경로들을 활용하여 개별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자 하는 국제 주류화 및 편승 전략의 사용도 확대(예, ISIL 문제의 국제화 및 중러의 자국관 반테러 연대 구축 시도)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여론의 교섭현상(spill-over) 추세도 강화되면서 통일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국제 채널을 활용한 한반도 통일의 국제 주류 이슈화 및 공론화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는 동북아 세력 판도를 놓고 경쟁하는 주요 강대국 간 권력 게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도화된 국제 기구 및 국제사회의 영향력 있는 공공소통채널을 활용한 의사 표현(broadcasting)을 통하여 한국 통일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것은 개

별 강대국의 개별 이해에 기초한 권력정치적인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와 한국의 통일 주도권을 강화시키는 데 순(順)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으로 통일 이후 문제에 대해 주변 강국에 대한 보장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즉, 국제 주류화는 또한 한국의 통일 이후 정책에 대한 일종의 국제적 감시 및 제약 효과를 가져와 주변국 보장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셋째, 통일 지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미중협력 강화는 북한의 억제와 한반도 평화 유지뿐만이 아니라 통일에도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이나 국제사회 또는 제3의 중재세력이 없는 동북아 지역사회 내 미중의 공고한 이익 카르텔(cartel)적 담합은 한국의 이익이 배제된 북한문제 해결 시도의 위험성(예, 청천강-원산 분할 통치안)도 증대시킬 여지가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를 위한 국제연결망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내 제3여론 주도 국가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상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타 국제 여론 주도세력과 매개적 영향력 담지 국가들(즉, 국제 네트워크 상의 약한 연결고리 국가들) 및 공론화 장으로서 공식·비공식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통일 우호적 국제협력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지지 확산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공공외교 상의 물량전은 한계가 있으므로 각국의 인적, 여론, 정보 네트워크상의 허브를 대상으로 한 집중 공략의 스마트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규륜 외.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대통령 비서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서울: 대통령 비서실,
1999.
- 딘킨, 알렉산드르.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김현택·
이상준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_____.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정호. 『우크라이나 정치의 이해』. 서울: 좋은땅, 2012.
- 배정호 외.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
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3.
_____.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_____.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엔쉐통. 『역사의 관성』. 북경: CITIC Press, 2013.
- 이기태 외.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서울:
한울, 2011.
- 허문영 외.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황병덕 외. 『중국의 G2부상과 한반도평화통일 추진전략』. 서울: 통일 연구원, 2011.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New York: Basic Books, 1998.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Monteiro, Nuno P. *Theory of Unipol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Nye, Joseph S.,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Rosecrance, Richard N. and Steven E. Miller, eds.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I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9.

Weeks, Jessica L. P. *Dictators at War and Pea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Weiss, Jessica C. *Powerful Patriots: Nationalist Protest in China's Foreign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RHP総合研究所. 『朝鮮半島統一にまつわる極東のパワーシフト: シミュレーションの報告と提言』. 東京: RHP総合研究所, 2001.
- A.A. ДЫНКИН. Под ред.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глобальный прогноз 2030*. Москва: Магистр, 2011.

2. 논문

- 다카시, 이노구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배정호.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외.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우준모. “우크라이나의 국가성 모색.” 『동서연구』. 제23권 1호, 2011.
- 우평균. “2011년 정상회담 이후 러·북관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분석.” 『국제문제연구』. 제15권 2호, 2015.
- 이명찬. “헌법9조의 개정과 ‘보통국가’, ‘권력국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화연구』. 제16권 2호, 2008.
- 한동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 서울: 형설출판사, 2015.
- 현승수.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민족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파주: 한울, 2012.
- .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종족 국민주의와 시민 국민주의의 착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지역 민족주의 정치』. 서울: 민속원, 2015.

- Barbieri, Katherine, Omar M. G. Keshk, and Brian Pollins. "TRADING DATA: Evaluating our Assumptions and Coding Rul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6, no. 5. 2009.
- Barsky, Kirill et al. "Russia's Foreign Policy in the Pacific Region." *Security Index*. vol. 17, no. 2. 2011.
- Beacháin, Donnacha Ó and Frederik Coene. "Go West: Georgia's European Identity and Its Role i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Nationalities Papers*. vol. 42, no. 6. 2014.
- Beckley, Michael. "The Myth of Entangling Allianc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 Fairbank, Charles H., Jr. "Georgia's Soviet Legacy." *Journal of Democracy*. vol. 21, no. 1. January 2010.
- Fearon, James D.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 Glaser, Charles L. "A U.S.-China Grand Bargain? The Hard Choice between Military Competition and Accommod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 Jones, Stephen. "The Role of Cultural Paradigms in Georgian Foreign Policy." In *Ideology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communist Foreign Policies*. Edited by Rick Fawn. London: Frank Cass, 2003.
- Joo, Seung-Ho. "Russia's Policy on Nuclear Prolife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cific Focus*. vol. 24, no. 2. 2014.

- Kelly, Robert E. "China's Interests in Korean Unification: How Much Longer is the 'Buffer' Worth It?"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 19, no. 2. 2014.
- Kuzio, Taras. "Ukraine: Coming to Terms with the Soviet Legac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4, no. 4. 1998.
- _____. "The National Factor in Ukraine's Quadruple Transition." *Contemporary Politics*. vol. 6, no. 2. 2000.
- Kydd, Andrew H. "Pulling the Plug: Can There Be a Deal with China on Korean Unific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2. 2015.
- Layne, Christopher.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1993.
- Mearsheimer, John J.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1990.
- Midlarsky, Manus I. and Ted Hopf. "Polarity and International Stabili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1. 1993.
- Miller, Steven E. "Introduction: The Sarajevo Centenary-1914 and the Rise of China." In *The Next Great War? The Roots of World War I and the Risk of U.S.-China Conflict*. Edited by Richard N. Rosecrance and Steven E. Miller. Cambridge: The MIT Press, 2014.
- Moisio, Sami et al. "Mapping the Political Geographies of Europeanization: National Discourses, External Perceptions

- and the Question of Popular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6. 2013.
- Müller, Martin. “Public Opinion toward the European Union in Georgia.” *Post-Soviet Affairs*. vol. 27, no. 1. 2011.
- Pevehouse, Jon C., Timothy Nordstrom, and Kevin Warnke. “The COW-2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Dataset Version 2.0.”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1, no. 2. 2004.
- Singer, J. David,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Peace, War, and Numbers*. Edited by Bruce M. Russett. Beverly Hills: Sage, 1972.
- Steinberg, James and Michael O’Hanlon. “Keep Hope Alive: How to Prevent U.S.-Chinese Relations from Blowing Up.” *Foreign Affairs*. vol. 93, no. 4. 2014.
- Tkachenko, Vadim P. “A Russian View on Korean Security after the North-South Summit.”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2, no. 2. Winter 2000.
- Wohlforth, William C.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1999.
- _____. “Unipolarity, Status Competition, and Great Power War.” *World Politics*. vol. 61, no. 1. 2009.
- 李奇泰, “米国の東アジア政策と日本の対韓安全保障政策: 在韓米軍撤退問題と日韓安全保障協力の模索, 1969~1979.” 慶應義塾大学博士学位論文, 2012.

Воронцов, А. “Позиция Китая по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а, 2013.

Денисов, Валерий . “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охраняются.” *Аналит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научно-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МГИМО (У) МИД России*. выпуск. vol. 8, no. 20. September 2006.

Ларин, В. “Угроза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спектив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Москва, 2013.

3. 기타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포브스』.

『YTN』.

『朝日新聞』.

『読売新聞』.

The Atlantic.

The Chosun Ilbo.

The New York Times.

The Straits Times.

Glaser, Charles L. “Time for a U.S.–China Grand Bargain.” Policy Brief.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Harvard Kennedy School. July 2015.

Lukin, Alexander. “Russian Strategic Thinking Regarding North Korea.” The Asan Special Forum. October 7, 2013.

MacFarlane, S. Neil. “Georgia: National Security Concept versus National Security.”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Paper. The Chatham House. August 2012.

Mikheev, Vasily. “Collapse of Socialism Comparison: Russia Experience and North Korea.” IMEMO. October 12, 2012.

Pollack, Jonathan D. “Is Xi Jinping Rethinking Korean Unification?” Presentation Paper. 3r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ecurity – Brookings Joint Conference. January 20, 2015.

Putin, Vladimir. “Voennaya Doktrina Rossiiskoi Federatsii.”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ember 2014.

외교부. <www.mofa.go.kr>.

유튜브. <www.youtube.com>.

일본 외무성. <www.mofa.go.jp>.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ttp://belfercenter.hks.harvard.edu>>.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

Newsland. <<http://newsland.com>>.
Pravda.Ru. <<http://www.pravda.ru>>.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ww.sipri.org>.
The Asan Forum. <www.theasanforum.org>.
The Association of Japonologists. <<http://japanstudies.ru>>.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www.correlatesofwar.org>.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http://gazeta.aif.ru>>.
Взгляд. <www.vz.ru>.
ВОЙНА и МИР. <www.warandpeace.ru>.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kprf.ru>>.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news.kremlin.ru>>.
РИА Новости. <<http://ria.ru>>.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http://russiancouncil.ru>>.
РУСКОР. <<http://ruskorinfo.ru>>.
Фонд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www.fondsk.ru>.

중국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2015.5.15.

4. 관련자료 목록

가. 단행본

배정호 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0.

_____.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서울: 오름, 2004.

Copeland, Dale C.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Gries, Peter H.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나. 논문

백우열.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3호, 2015.

정성철. “관심전환전쟁이론: 논리와 근거.”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5호, 2013.

Levy, Jack S. and William R. Thompson. “Balancing on Land and at Sea: Do States Ally against the Leading Global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Rosato, Sebastian. “The Inscrutable Intentions of Great Powe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3. Winter 2014/15.

다. 기타자료

김현욱. “2015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04. 2015.3.4.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소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통북아질서 시대의 등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한국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